
노동자 우도 관 연구소 출범자료집

10월 21일(목)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Alternative Workers Movements

출범식 순서

출범토론회 15시~18시 30분

1부

세계 경제위기 현황과 전망
박하순(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

2부

한국노동자운동의 이념과 과제

발표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토론

김태연(노동전선 집행위원장)
서장수(민중행동 상근활동가)
임승철(혁신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출범식 19시~20시

- 1_민중의례
- 2_내빈 소개
- 3_연구소 활동 경과 보고
- 4_내빈 축사
- 5_출범사
- 6_폐회

자료집 순서

소개_4

세계 경제위기 현황과 전망_7

박하순(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

한국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과제_20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노동운동 지형변화에 따른 운동방향의 재정립_40

김태연(노동전선 집행위원장)

민주노조운동과 지역 연대운동 강화를 위한 고민_52

서장수(민중행동 상근활동가)

토론문_59

임승철(혁신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토론문_75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출범 경과

- 2009. 2.21 사회진보연대 총회, 부설기관 노동자운동연구소 설립 결의. (“신자유주의 시대 위기에 빠진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개척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2009. 3 노동자운동연구소 준비위원회 활동 시작
- 2009.10 사회운동노조주의 연구팀 세미나 시작
- 2010.10. 7 워크숍 〈한국 제조업 현실과 금속노조 운동의 쟁점〉 개최
- 2010.10.14 워크숍 〈경제위기 시대 공공운수 노동자운동의 전략〉 개최
- 2010.10.21 노동자운동연구소 출범

주요 연구

- 금속노조 노동시간단축 요구_2009. 3
- 최근 고용 임금 노동시간 실태_2009. 5
- GM 파산과 GM대우 구조조정 전망_2009. 5
- 세계 자동차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정리해고 현황_2009. 9
- 2010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_2010. 1
- 초민족자본의 노동권 파괴와 노동자운동의 대응 전략_2010. 1
- 개정 노동조합법의 영향과 대응 방향_2010. 3
- 총연맹 선거 이후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에 대한 제언_2010. 3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문제점 분석_2010. 4
 2010년 금속노조 투쟁과 혁신 방향에 대한 제언_2010. 5
 한국 전자산업 현황과 노동자운동의 대응 방향_2010. 6
 그리스 위기의 전망과 사회운동의 대안_2010. 7
 최저임금투쟁 일보전진을 위한 과제_2010. 8
 2010년 5-7월 중국 노동자의 연쇄 파업과 시위_2010. 8
 세계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_2010. 8
 경제위기와 한국 노동자운동_2010. 9
 현 시기 노조 여성사업 강화를 위한 제안_2010. 9
 미국 노동자운동의 경제위기 대응 진단_2010. 9
 소책자 「노동조합 활동가를 위한 노동경제 통계 가이드」 발행_2010. 9
 도서 『마르크스의 임금이론』 출간_2010.10

단위 노동조합 경영 분석
 투쟁사업장 지원(정리해고·구조조정 분석)

노조 공동 연구

금속노조 『금속노동자를 위한 경제·경영 지표 분석』_2009
 공공운수연맹 철도본부 ‘철도 구조조정’_2009
 민주노총 ‘외투기업 구조조정 대응 전략’_2010
 민주노총 ‘구조조정의 효과와 문제점’_2010

연구소 주요 사업 방향

1. 연구사업

- 총연맹·산별노조 중장기 전략 연구
- 노동조합 고용·임금 정책 생산
- 노동·경제 통계 조사·분석
- 노동조합을 위한 경제·경영 분석

- 노동자 국제연대 사업
- 노동조합 페미니즘 연구

2. 교육사업

- '노동조합 활동가를 위한 핸드북' 시리즈 발간
- 노동조합 교육 사업 지원
- 월례 심포지엄, 각종 강좌·세미나 개설

3. 매체

- 이슈리포트: 노동자운동 주요 쟁점을 심층 분석하여 온·오프 라인으로 매월 1-2회 발간
- 주간 정세 분석: 한 주의 노동·경제 통계와 주요 쟁점을 온라인으로 발간
- 각종 도서 발간: 주요 연구물과 교육자료, 번역물을 책자로 발간

연구원 구성

소장 | 박하순

연구실

연구실장 | 한지원. 노동·경제 정책 연구
조사통계국장 | 이유미. 노동·경제 통계 조사
연구원 | 공성식

교육실

교육실장 | 류주형. 교육 자료 생산
국제국장 | 임월산. 노동자 국제연대 사업
연구원 | 조은석

세계 경제위기 현황과 전망

박하순(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

1. 서

2007년 미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번진 경제위기,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최대의 위기는 이제 끝났는가? 나라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세계경제는 2009년 3/4분기부터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남은 문제가 만만치 않다. 미국은 지지부진한 성장 인해 더블딥 이야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2차 수량완화가 취해질 예정이며, 중국의 위안화절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아일랜드와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부채 문제가 여전히 이것의 완전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 또한 엔화 가치 상승 및 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위기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의문을 낳게 하였다. 심지어는 지배세력 내에서조차 그러하였다. 그래서 대안세계화 활동가들 일부에서 이야기되던 외환거래세(토빈세) 도입 문제가 영국 수상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가 하면, 모든 국유부문을 팔아치우지 못해 안달이던 각국의 정부가 위기가 한창일 때에는 거대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하기도 하였다. 정세의 변화라 해야겠다.

이에 채 끝나지 않은 이번 위기의 현재를 살피고 전망을 해 보기로 하자. 경제위기 지속이 자동적으로 노동자운동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운동의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2. 경제위기 현황과 전망

주로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경제위기의 현황을 점검하고 전망을 해보기로 하자. 말미에 한국경제 쟁점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1) 미국경제 현황

2년여 전, 2008년 9월 미국 제 4위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붕괴되면서 세계경제는 한치 앞을 모르는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1930년대 세계대불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해졌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결국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경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각국경제는 1년 반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연율로 환산한 분기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08년 4사분기로 -6.8%를 기록했고, 연간성장률로는 2009년에 -2.6%였다), 2009년 3/4분기부터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경제지표상으로는 경제위기가 종료된 것이다. "세계대불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가 사실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위기의 심도나 기간을 보면 이번 경제위기는 1930년대 대불황에 견줄 정도는 아니다(세계대불황 당시 미국에서는 4년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첫 세 해는 매 해 10%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 이후 경제가 성장하다가 5년 뒤에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해 결국 2차 대전에 정부의 막대한 군비지출(군사적 케인즈주의)을 통해 완전히 불황에서 탈피하였던 것이다. 물론 라트비아 등 발트 3국과 아이랜드 등의 경우 이번 위기가 1930년대 대불황에 근접하고 있기는 하다.)

이런 상황의 호전은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취해진 금리인하 및 수량완화 같은 통화정책과 대규모 경기부양 같은 케인스주의적 정책, 금융부분과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자금지원, G20으로 상징되는 국제적인 공조 등의 정책들이 일정하게 효과를 발휘해서 가능했고,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들의 강력한 성장세 또한 불황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위기가 한창인 시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고, 회복 시에는 수입 증대를 통해 동아시아, 심지어는 독일과 미국의 회복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위기 초기부터 중국 등의 개도국은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탈동조화' 주장이 있긴 했지만 위기극복과정을 보면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이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변수로서 위기가 이 정도에 그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세계대불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는 종료되었고 세계경제도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답은 부정적이다. 미국의 성장세는 대폭 하락하여 여전히 더블딥(경기재침체) 가능성이 이야기될 정도이고, 그리스로 대표되는 남유럽 몇 나라와 아일랜드의 국가부채는 여전히 현안으로 등장해 있어 해결난망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에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이후 세계경제의 향방을 전망해 보는데 우선미국경제 현황부터 보기로 하자. 미국경제는 2009년 3/4분기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뒤 2009년 4/4분기 성장률은 5.0%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2010년 1/4분기 성장률은 3.7%로 둔화되었고, 2/4분기에는 1.7%로 더욱 낮아졌다. 거의 정체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에서 적절히 드러나듯이 1년여의 플러스 성장 뒤에도 고용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 9월 실업률은 9.6%로 2009년 10월에 기록한 직전 최고치 10.1%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졌지만, 5월에서 8월 사이 실업률은 9.5%에서 9.7% 사이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최근 들어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고,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미한 성장으로 인해 신규 고용 창출이 거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업률은 위기 이전 4-5%대 실업률에 비춰보면 매우 높은 것이고, 장기실업자 비율 등 여러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 보건대 전후 최악의 고용상황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화폐증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통화주의자들과는 달리, 물가상승률은 1% 이하로 쉼 준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으며 일본의 장기불황 때와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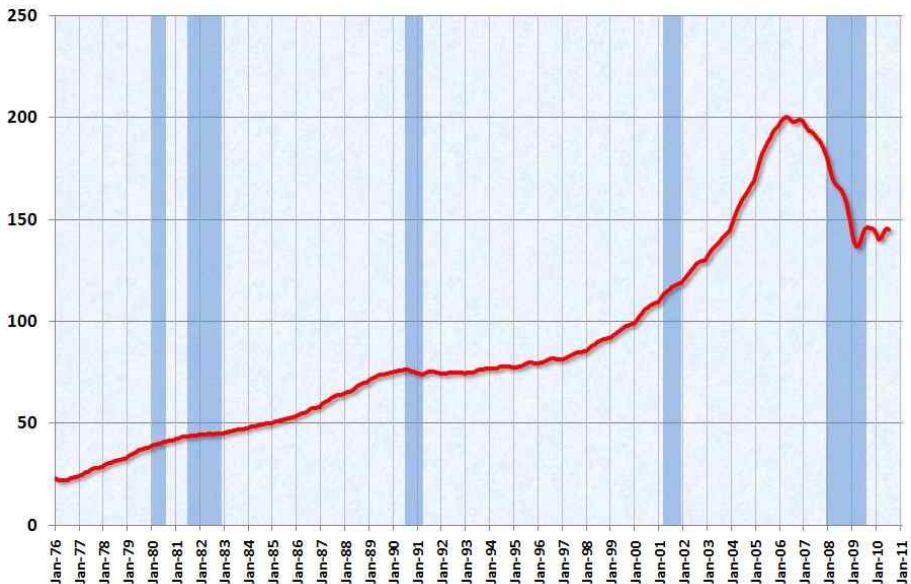
2) 미국경제 전망

그러면 이후 미국경제는 어떤 모습을 띠까? 우선 간단히 지적할 사안은 이후 경기부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이라는 것과, 지난 1년 동안의 성장 중 재고변화의 기여도가 약 60%에 달했는데 이것이 거의 소멸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경기부양 감소 그 자체로만 보면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이고, 재고증가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자. 우선, 부동산-주택부분부터. 이번 위기의 진원지였던 주택부문은 약간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판매량은 금융기관 차압주택 판매가 반을 차지할 정도로 극히 부진하고, 주택가격은 약간 상승한 후 계걸음을 하다가, 7월부터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는 보도다(〈그림 1〉 참조). 신규주택 구입 시 제공되던 8,000달러 세제혜택 조치가 4월로 종료되고 난 뒤의 일이다. 물론 케이스-실러 지수로 33-34%가 하락했던 1차 하락 때와 같은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5-10%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원리금 상환 연체 및 유질처분은 늘어날 것이고, 주택담보대출에 기초하여 발행된 각종 유사채권들의 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이며, 아직 이런 채권들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다시 부실해 질 것이다. 또한 지금도 상환해야 할 주택담보대출금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일명 '깡통주택'(마이너스 에퀴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수가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의 약 23%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들 가계의 소비가 더욱 움츠러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사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동력만 소유한' 노동자가 아니라, '깡통주택'이라는 마이너스 자산까지 소유하고 있어서 노동자의 지위에도 미달한 일종의 주택노예라 칭할 만하다. 실제로 이들은 실업을 당했어도 노숙을 무릅쓰지 않고는 멀리 다른 곳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만 교수는 미국에서 신규 채용공고가 꽤 늘고 있는데도 실업률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깡통주택'에 갇혀 있는 노동자가계를 지목하기도 한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런 주택부문 침체가 단기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림 1〉 CoreLogic 주택가격 지수, 2010년 7월(2000년 1월 = 100)



출처: <http://www.calculatedriskblog.com/>

둘째, 대외 조건을 살펴보자. 우리가 보기엔 미국경제가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상을 통해서 수출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유럽은 단기간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국가부채 문제를 안고 있어서 유로화 가치 상승이 어려운 상태이고, 엔화 가치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미국에서 2차 수량완화 정책을 펼칠 예정으로 있어 달러 가치에 비해 엔화와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달러 가치에 비해 엔화와 유로화 가치 상승은 이들 지역의 성장세를 둔화시켜 조만간 다시 이들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성장률이 비교적 높아 유로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현재 국가부채 문제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들과 아일랜드는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결국 이들 노쇠한 자본주의 세 중심부는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해 불황과 실업을 상대방에게 수출해야만 그나마 연명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하겠다. 그런데 어느 국가 또는 지역도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불황과 실업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달러, 유로, 엔의 가치가 동시에 하락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문제는 위안화절상 여부이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구가하고 있어 위안화 절상 여력은 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 기간에 위안화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켜 놓았던 중국당국은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하여 위안화 가치가 일정하게는 다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위안화 가치 상승은 2-3% 정도에 그쳐 20-30% 정도의 절상을 원하는 미국의 기대에는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크루그만 교수 같은 이는 중국의 이런 환율관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자금이 미국에서 철수하여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수출을 늘릴 수 있어 미국에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환율관리가 '부자 몸 사리기' 측면이 없지는 않고 이것이 세계 경제나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도, 개도국에서의 대폭적인 평가절상-거품형성-경상수지 악화-거품붕괴-초민족자본 철수-경제위기의 사이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마당에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상을 회피하려는 중국의 처신을 비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중국을 설득하고 강제해낼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위안화 절상을 통한 대 중국 수출 증가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다음으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 가능성을 살펴보자. 이후 현재의 저성장과 고실업을 상당부분 해결할 정도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가능성은 있는가? 이도 부정적이다. 성장률이 지지부진하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오바마와 민주당의 지지는 하락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공화당을 견제하면서 상당 규모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안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정부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소소한 규모면 몰라도 현재의 실업률을 대폭 낮출 정도의 대규모 추가부양책은 오바마와 민주당마저도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는 그야말로 경제위기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하반기 들어 더욱 악화되고 실업률은 거의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10% 내외의 실업률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요부족으로 인해 이렇게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다면 준 디플레이션 상황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비록 2차 수량완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편 정부부채 증가를 무릅쓰면서 추가 부양을 하고, 추가 수량완화를 진행하고, 중국에 대한 압력을 통해 위안화 절상을 유도해서 성장률이 일정하게 회복되고 실업률이 일정하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이 때야 말로 그동안의 투자 부진으로 인한 공급 상의 애로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또한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실업률은 크게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를 잡는다 통화량을 죄고 금리를 올릴 경우 추가적인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즉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성장에 병행하여 무역수지 적자와 대외부채가 증대할 것이다. 결국 세계경제를 이끌고 가야 할 미국자본주의는 장기불황과 준 디플레이션, 일정한 성장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무역지 적자 및 대외부채 증대 등 연옥(煉獄)의 상태를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중국이 미국 등 세계자본주의를 구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2007-2009년의 위기가 (특히 아시아에서) 이 정도로 그친 것도 중국효과가 적지 않게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여 새로운 헤게모니로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의 위계에서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반)주변의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중국이 수렁에 빠진 세 중심부를 다 부양시킬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다. 막대한 인구와 외환보유를 통해 당분간 약간의 부양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역량 이상의 역할을 떠맡을 경우 중국 자체가 거대한 거품형성 및 붕괴의 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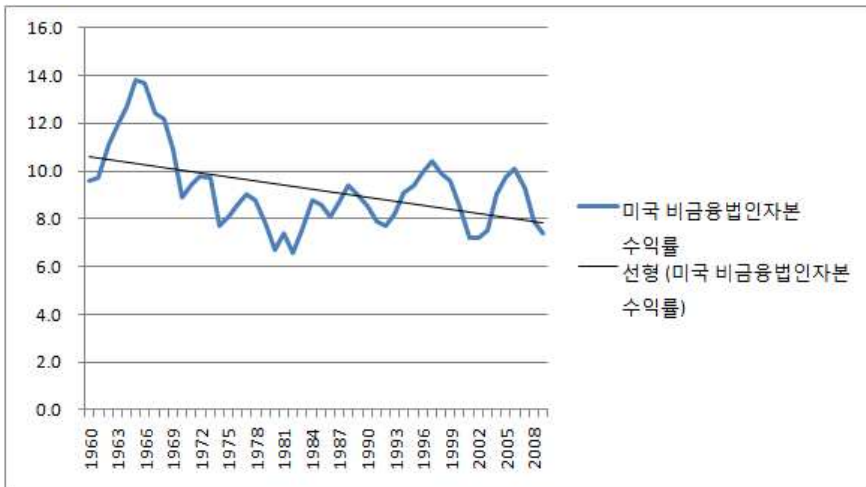
3) 이윤율추이를 통해 본 미국자본주의

이윤율 대응으로 비금융법인자본 세전수익률(=영업이익/(순자본스톡+채고))을 이용하여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향방을 이야기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 중반 전후 최고치에 오른 미국자본주의의 이윤율은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시기를 보다 세분해보면 80년대 초반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한 이윤율은 초민족적 거대자본들이 IT혁명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통해 노동자와 개도국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면서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말까지 미약하나마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90년대 말-2000년 초반 IT 거품형성과 붕괴로 이런 기조는 꺾이고, 2007년 부동산-주택 부분의 거품형성과 붕괴는 이를 다시 확인한다. 즉 80년대 중반부터 1997년까지의 상승추세가 그 뒤에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생산성(=국민소득/유형고정자산) 추이도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는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하락한다(그림 3) 참조).

〈그림 2〉 미국 비금융법인자본 수익률(196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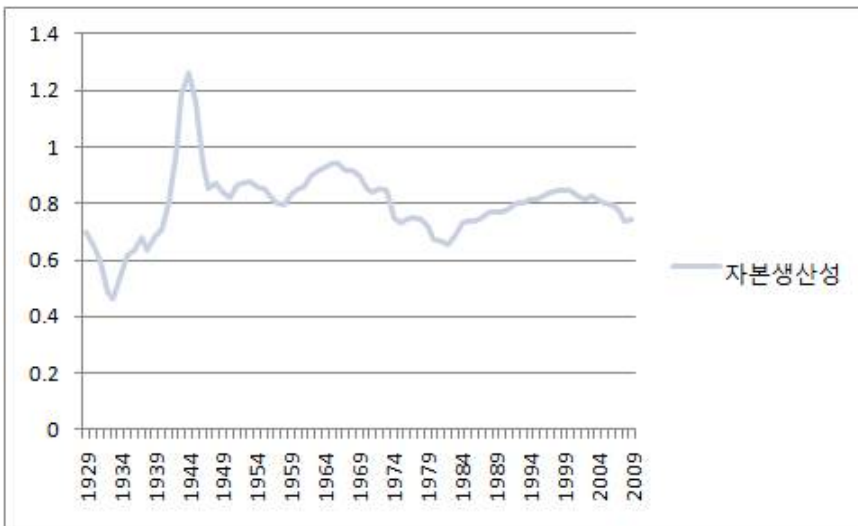


자료: <http://www.bea.gov>

이후 이윤율과 자본생산성의 추세는 어떻게 될까? 이윤율(=자본생산성×이윤분배율)에 규정적인 것은 사실 자본생산성이므로 자본생산성의 추이를 예상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자본생산성의 상승은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새로운 대규모의 자본축적을 전제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수요부족의 상황에서는 작아진 이윤량으로 인해 새로운 대규모의 자본축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고용인구의 감소 혹은 정책으로 분업 협업의 확대를 통한 생산성제고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결국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자본생산성의 후퇴 내지 정체상태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사실 2000년대 중반 주택부문에서의 거대한 거품형성 및 붕괴는 미국자본주의의 후퇴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90년대 말 IT 거품은 생산성증대의 결과나 아니냐를 논란해볼 여지라도 있었으나 주택부문 활성화에서 투자은행 등 거대 금융기관들이 얻은 막대한 이익과 주택투기자들이 얻는 투기이익은 대부분 금융조작의 결과였을 뿐이다).

〈그림 3〉 미국의 자본생산성(1929-2009)



단기이윤율은 근로조건의 하락이나 상승, 가동률의 증감, 달러가치의 하락 또는 상승으로 인한 해외투자자산의 소득 증감 등으로 약간의 부침을 겪겠지만 1997년의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 주택부문의 추가적인 악화,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르는 남유럽 상황과 아일랜드의 현저한 악화, 중국의 저성장 궤도로의 진입 등 예상치 못한 내외부 변수와 만나게 된다면 이윤율은 2001년이나 2009년 수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자본생산성과 이윤율 운동이 이런 궤적을 그린다고 한다면 미국자본주의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리한 불황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겹친다면 심각한 위기를 또다시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 등 몇 나라는 미국 및 유럽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이들도 자본주의 중심국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4) 한국경제 현황

(1) 이윤율¹⁾²⁾로 본 한국경제

이윤율 대응으로 제조업 유형고정자산영업이윤율을 사용해 한국자본주의를 살펴보자. 한국자본주의의 이윤율은 길게는 1966년 이래, 짧게는 1986년 이래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러나 97/98년 경제위기 이후만 보면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매우 낮아진 이윤율(98년, 99년, 2001년 이윤율은 12% 초반대로 하락했고, 2000년에는 정보기술산업(IT)의 반짝 호황으로 이윤율이 약간 높아졌으나 대체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은 그 이후 약간 높아졌고 2004년에는 이윤율이 22.08%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이윤율 수준은 대체로 90년대 중반 수준으로 7-80년대 수준에는 현저히 미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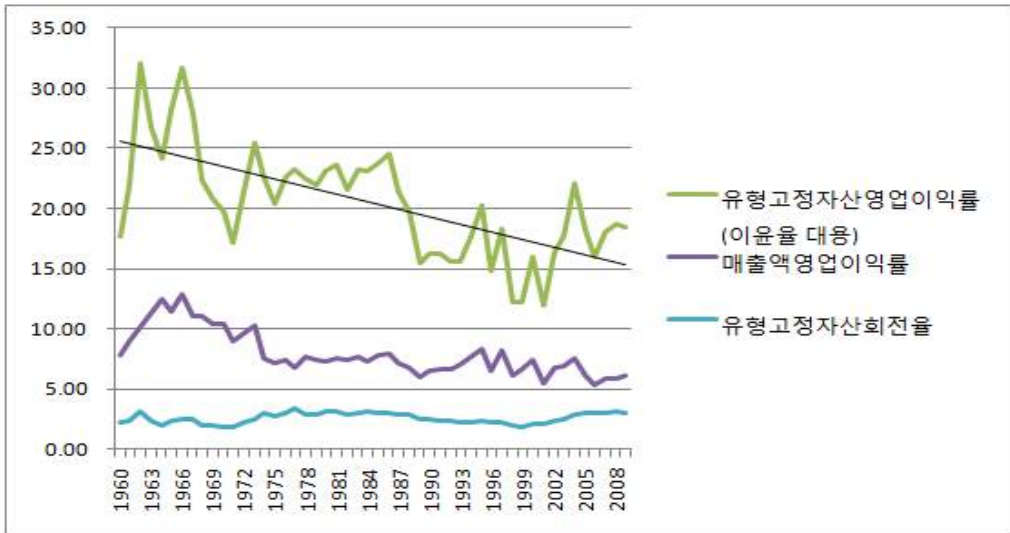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기의 이윤율은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그림 > 참조), 이는 주로 유형고정자산회전율(이하 '회전율')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회전율이 1999년 1.85에서 2008년 3.18로 상승했다. 가동률이 높았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투자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희생, 투자부진 속에서 이루어진 이윤율 상승이어서 이윤율이 장기적인 상승추세로 돌아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윤율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현금보유는 이번 위기에서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쓰러진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대체로 투자가 부진한 상태다. 이는 한국자본주의가 실물축적과 생산성 증대의 선순환이 대체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1) 이윤율의 대응으로서 제조업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매출액영업이익률*유형고정자산회전율)을 이용하자. 참고로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유형고정자산회전율=매출액÷유형고정자산×100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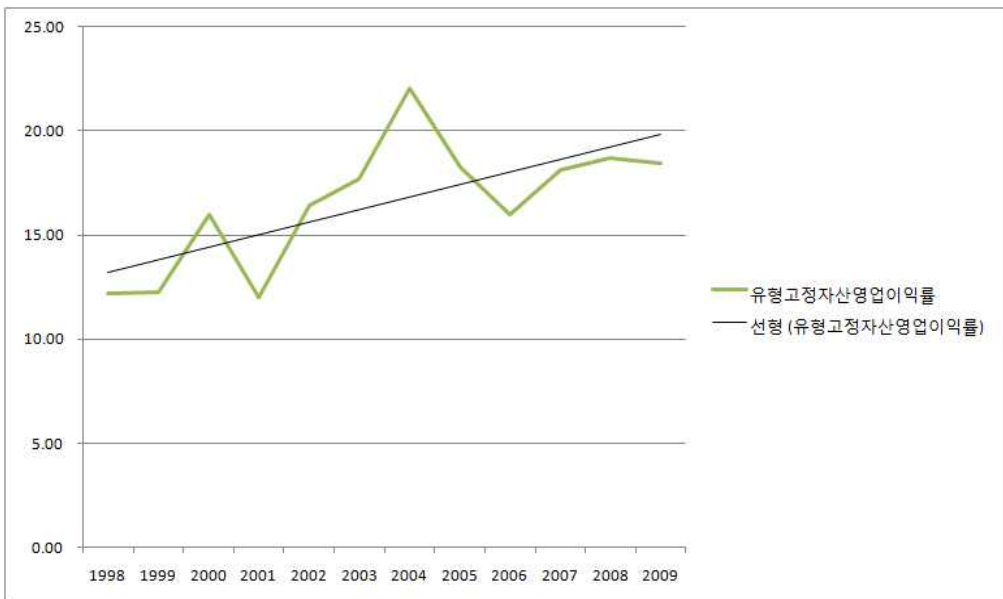
2) 한편 유형고정자산의 시가 반영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외환위기 이전에는 도매물가가 누적해서 25% 이상 상승하면 고정자산 재평가를 할 수 있었고,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2008년까지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었다),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은 시가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영업이익률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었다 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60-70년대에는 특히 그렇다 하겠다. 한편 2008년까지 10년 동안은 유형고정자산이 과 소계상되었을 것이므로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시기에는 물가가 크게 오르는 않아서 커다란 왜곡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림 4〉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1960-2009)



원자료: 한국은행

〈그림 5〉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1998-2009)



원자료: 한국은행

(2) 순국제투자자산잔액

대외채무와 대외채권(외환보유고는 이것의 커다란 일부이다), 외국인 주식투자 및 직접투자 자산,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 및 직접투자 자산을 총 망라하여 집계한 통계가 대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다. 그리고 그 차액이 순국제투자자산이다. 이 통계는 한국경제의 대외불안정성을 측량하는 주요 지표이다.

〈표 1〉 국제투자자산

(단위: 억달러)

| | A.대외투자 | B.외국인투자 | C.순국제투자(A-B) |
|-----------|---------|---------|--------------|
| 2001 | 1,850.4 | 2,488.2 | -637.8 |
| 2002 | 2,068.2 | 2,771.7 | -703.6 |
| 2003 | 2,581.4 | 3,377.6 | -796.1 |
| 2004 | 3,297.3 | 4,134.9 | -837.6 |
| 2005 | 3,684.3 | 5,394.4 | -1,710.1 |
| 2006 | 4,655.6 | 6,522.6 | -1,867.0 |
| 2007. 3/4 | 5,569.0 | 8,098.1 | -2,529.2 |
| 2007 | 5,967.9 | 8,263.3 | -2,295.4 |
| 2008 | 4,954.3 | 6,084.9 | -1,130.6 |
| 2009 | 6,047.3 | 7,527.6 | -1,480.3 |
| 2010. 2/4 | 6,208.2 | 7,518.6 | -1,310.4 |

노무현 정권 말기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인투자 자산 가치는 폭등했다. 2007년 3/4 분기에 무려 8,098억달러에 달했다. 국내인의 대외투자(외환보유고 포함) 자산은 5569억원이었다. 대외투자 자산과 외국인투자 자산 차액은 -2,529억달러에 달했다. 그런데 원화가치가 급등하면서 설상가상으로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하였다. 결국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초민족자본의 탈출러쉬가 있었다. 2007년 10월 910원대 환율은 2009년 3월에는 1500원을 넘나들었다.³⁾

3) 한국경제의 경우 경제위기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했는데 환율변동은 세계 최고수준이었다. 그리고 외환확보를 위해 통화스왑까지 해야 했다. 그 원인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휘발성이 강한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장악되어 있고, 순국제투자자산 마이너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아이엠에프 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해 들어간 때문이다. 아이엠에프 위기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편입을 통해 극복했노라 한 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의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시민단체들의 무지가 빚어낸 결과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비판하고 등장한 보

외국인투자의 탈출, 원화가치 하락,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인해 2008년 말 순국제투자자산 마이너스 규모는 1,13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그 이후 순국제투자자산 마이너스 규모는 주가상승,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정도는 아직 미미하다. 아직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자본주의에는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유입, 원화가치 상승, 주식시장의 거품화, 무역수지 악화, 초민족적 자본의 이탈이라는 위기싸이클이 장착되어 있다. 지금 처럼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대외부문의 안정은 3-4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한편 원화가치 상승압력 속에서 대외경쟁력을 유지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자본은 강력한 임금억제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금억제를 위한 능력주의 인사관리 및 연봉제 도입,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 노조활동 탄압 등도 당연히 동반될 것이다.

(3) 소결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불안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높고 주택투기거품이 심하게 일었던 스페인보다도 높다. 그동안 진행된 고용불안과 임금억제, 도시민의 투기붐에의 참여 등이 그 원인이라 해야겠다.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한다면 지금보다 더 커다란 거시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해야겠다.

정부부채도 문제는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의 위기국들이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 하겠다.

결국 한국의 순국제투자자산으로 표시되는 한국경제의 순 대외자산의 마이너스 규모는 줄어들었으나 노동에 공격을 강화하여 자본은 엄청난 이익을 향유한 반면 가계는 임금억제, 고용불안 등으로 부채증대에 시달리고 있다.

수주자들도 또한 비판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경제정책에서의 정책적 차별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려니와 위기의 씨앗은 이들 세력 집권시기에 뿌려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747' 공약이 무지에 의한 것이거나 사기라는 것은 이제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 더욱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면 경제위기의 책임을 이리저리한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지우는 것도 한계는 있다. 구조적 위기를 특정 부르주아 정치세력이 말끔히 해소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판의 칼날은 자본주의 이후를 이야기하는 운동세력에게로도 향할 수 있다. 지금은 붕괴한 '현실사회주의'와 다른 대안이 마련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냐고.

이런 크고 작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본주의는 중국경제의 활황에 기대 2-3년간은 순항하겠지만, 중국경제가 저성장체도로 진입한다거나, 원화가치의 급격한 절상이 이루어질 경우 위기 메카니즘이 작동하면서 상당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국가와 자본은 이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결

2007년에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는 채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자본주의 세 중심부 미국, 유럽, 일본 경제는 대체로 지지부진한 장기불황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를 증발해도 그것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으며, 그래서 준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부채 규모가 상당한 규모여서 재정정책의 수단도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불황과 실업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상대국이나 다른 개도국들의 통화가치 절상을 두고 상당한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장기에 걸친 10% 내외의 실업률을 1930년대 이후엔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아 이것이 미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원화가치 상승은 위험스럽다. 위기 이전 몇 차례 반복된 위기 사이클이 3-4년 안에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객관적 조건으로 보면 노동자운동은 자본주의 이후를 당연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역사적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철저한 검토, 노동자 내부의 단결과 연대, 새로운 대안 사회에 대한 모색 등이 이번 경제위기가 우리에게 부여한 과제라 해야겠다.

한국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과제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시대의 민주노조운동 과제를 중심으로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 본 토론회는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를 출범하며, 연구소가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의 방향을 밝히고, 여러 동지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탄압과 민주노조 운동의 지체된 혁신으로 노동자운동이 큰 위기에 처한 지금, 동지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1. 07~0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변화된 정세와 과제

올해 민주노조운동은 민주노총 건설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권의 탄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고 치밀하게 진행 중이지만 민주노총의 대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다. 민주노조 운동의 손발을 묶을 개악 노조법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공공운수연맹과 금속노조의 대기업 노조들은 정권의 탄압으로, 실리적 타협으로 전체 투쟁 전선에 함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에서 모범적 운동을 만들어 왔던 여러 노조들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하나 둘 씩 쓰러져 가고 있다. 초기업노조 운동을 위해 수년간 추진해 온 금속과 공공의 산별노조 건설 강화 운동은 조직 체계 정비도 끝내지도 못한 채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다시 연맹시절로 되돌아 갈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투쟁 전선은 지금

말도 꺼내기 쉽지 않는 상황이며,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 수준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현재 많은 이들이 이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존폐를 걱정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민주노조운동이 이렇게까지 내몰린 이유는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이전 정권에 비해 질적으로 크게 달라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지난 20여 년 간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민주노조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정권은 철저히 재벌 대기업의 노조 관리 정책에 협조적이었고, 정부가 허용하는 선을 넘어서 투쟁에는 무자비한 공권력을 휘둘렀다. 김대중 정권이 대우차 투쟁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노무현 정권이 이랜드 투쟁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명박 정권이 쌍용차 투쟁에서 보여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배제와 포섭의 경계만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약간씩 조정할 뿐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뀐 적은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다. 작년 세계경제위기는 단지 순환적 경기 변화나 금융 사고로 인한 혼란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 큰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그 때마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민주노조를 더욱 심하게 몰아붙일 것이다.

이 번 경제위기는 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가 금융 세계화로 지연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앞으로 더욱 큰 경제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러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자본주의는 생산성 혁신이 지체되며 70년대부터 이윤율 하락의 장기 추세로 진입했고,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금융화를 통해 이윤율 하락에 대응해 왔다. 금융 자본은 자산 시장에서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이윤율 가상으로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화는 90년대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품에 거품을 만들다가 21세기 초반 IT버블 붕괴로 첫 번째 한계를 드러냈고, 더 큰 자산 규모로 주식 시장을 대체한 부동산 시장 역시 온갖 파생금융상품을 만들며 거품을 일으키다 붕괴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을 대체했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더 큰 자산 시장은 지구상에 아직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금융 세계화를 확장할 수단이 없어 20세기 초와 같은 생산성 혁명이 없이는 자본주의가 이윤율 저하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경제 정책들은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형태만을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화폐 달러에 대한 발권력을 이용한 미국의 재정 통화정책은 정

부 재정 부실과 세계적 환율 전쟁을 야기하고 있고, 유럽 정부들의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남부 유럽을 시작으로 재정 위기와 이에 따른 금융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80년대 이후 형성된 자산 거품과 이에 따른 부실은 여기 저기 형태만 달리 하여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나마 중국 시장이 미국과 유럽 제조업 자본을 떠받쳐주며 세계 경제가 그럭저럭 버티도록 만들어 주고 있지만, 중국은 산업혁명을 만들어 낸 18세기 영국도 아니고 생산성 혁명을 만들어 낸 20세기 미국도 아니다. 아직 확장 가능성이 조금 더 존재하는 미개척 시장과 풍부한 저임금 노동이 자본에게 잠시 숨 쉴 여유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아직까지는 미국 자본주의를 대체할 국가는 지구상에 없어 보인다.

한국 경제는 현재 선진국 기업들의 부진, 환율, 중국 시장 등으로 상황의 지대를 누리고 있지만 수출 중심 경제에서 세계 경제와 동떨어진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수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 이상이고, 2008~2009년 경제위기 와중에서는 50%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 수출은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실상 자본 입장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 대책이란 이들 재벌 대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일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이 좀 더 비용 절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청 기업 수탈을 보장하고 노조 투쟁을 관리하는 것이며, 때로는 재벌 대기업의 부실을 공공 부채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2009년 경제 위기 과정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적나라하게 나타났는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원-하청 불공정 문제부터 영남권 자동차 부품사, 전자 부품 노조들에 대한 고강도 탄압, 대부분 재벌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4대강사업과 소비 보조 세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 위기가 더욱 빈번히 발발하고 저성장 국면이 계속될수록 고용형태, 하청체계에 따른 노동자 간 격차⁴⁾, 정권과 자본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민주노조 약화, 정부 재정 악화 등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런 양상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정책 수단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조직된 노동자에게 크게 통제되지도 않는 민주당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해야 가능한 변화를

4) 고용형태별 근로조사에 따르면 정규직(노동부 기준)의 실질임금은 경제 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 2009년 하여 0.9% 정도 증가가 있었던 반면, 비정규직(노동부 기준)은 2.6% 이상의 실질 임금 감소가 있었다. 한편 원-하청 사이의 임금 격차는 고용형태로 인한 격차보다도 더욱 크게 벌어졌다.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어 대부분이 완성차와 1차 부품사인 300인 이상 기업과 2차 하청 이하인 300인 미만 기업을 보면 2008년 1/4분기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임금은 대기업에 비해 59% 수준이었는데, 경제 위기 이후인 2010년 1/4분기는 47%까지 12%포인트 하락했다. 액수 격차는 2008년 1/4분기 월 149만원에서 2010년 1/4분기 월 252만원까지 확대되었다.

추진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남북관계 정도가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지점으로 보인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저성장-위기반복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적 변화를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앞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된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앞으로 저성장, 반복되는 경제위기, 구조조정과 추가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권의 민주노조운동 탄압이라는 조건을 뚫고 나가야 한다. 더군다나 노조법 개악으로 올해 타임오프제에 이어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복수노조창구단일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아래서 민주노조운동 진영에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해 본다.

① 우선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정립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그 출범부터 현재까지 사회협약을 중심으로 국가적 수준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희망해 왔다. 하지만 노사정위로 대표되는 사회협약 전략은 노사관계 안정화는 고사하고 정부의 노동유연화법안, 노동약법 추진에 정당성만 부여해준 꼴이 되었다. 노사정위의 1998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과건제 합의, 2006년 비정규직법안과 필수업무유지의무 및 대체근로 허용 기습 통과 등은 대표적 예다. 사회협약 중심의 노동운동 상은 상층 중심의 노사관계 설계에 몰두하면서 현실 투쟁을 고취하는데도, 사회 협약을 실제로 쟁취하는데도 실패하였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가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세계 지향점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 사회적 정치적 운동을 해나가는 노조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우며, 이를 노동자들과 토론해 나가는 집단적 교육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정립은 상징적 선언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집단적 토론하고 실천해나가며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교육 시간은 평균 연 14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60% 정도가 총회, 공청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질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해 보는 단협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 교육 체계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② 60~70년대 유럽 정세에 기반을 둔 산별노조 모델은 한계에 부딪혔다. 조직 재편 문제로 내부 갈등을 조성하는 것보다 우선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지역지부의 초기업노조운동, 총연맹 지역본부 중심의 지역연대운동 모범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금속과 공공에서 경험했듯이 자본의 필사적 집단교섭 회피, 정부의 방해 공작이 계속되고 있어 민주노조가 현재 역량으로 산별교섭-지역지부 편제를 이루어 낸다는 것은 당장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다. 고성장하는 세계 경제를 배경으로 독일 등에서 노사정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노사 관계 안정화 프로그램으로 합의한 교섭-조직 모델이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시대, 한국의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탈 구조 속에서 가능하리라 믿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초기업노조 운동은 현재와 같은 ‘조직 공학적 설계’가 아니라 ‘사회운동적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 등 민주노조 운동에서 주변화 된 노동자의 조직화도 이러한 가운데 가능할 것이다.

③ 세계최고수준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극단적 수직적 하청 구조는 저성장 위기반복 국면에서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와 노동조건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산별중앙교섭, 지역집단교섭과 같은 교섭 체계를 만들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현실 역관계와 경제위기 정세에서 요원하다. 이상적 ‘교섭체계와 조직모델’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를 최대한 이용한 ‘현실적 투쟁’을 중심으로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한다. 현실 가능한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투쟁을 ‘국민임단투’라는 명칭에 걸맞게 확대시켜 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최저임금투쟁이 그 자체로 경제 위기의 원인에 맞선 투쟁이거나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이행적 과제는 아니겠으나, 총노동투쟁전선도 산별차원의 집단교섭도 모두 형해화되어 있는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총연맹을 중심으로 노동자 단결과 전개급적 문제를 내걸고 자신감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단기적 계기로서는 충분할 것이다.

2. 이념적·조직적 과제

1) 이념적 과제 : 자본주의 변혁과 사회운동노조

정세에서 밝혔듯이 현재 자본주의는 그 구조적 모순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 자본주의 체제를 변화시킬 주체 역시 부재하다는 것이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로 지칭 될 만큼 큰 위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노동자 운동이 새로운 대안 세계 전망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경제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유럽의 경우 사회협약이 활성화되었는데, 정부는 부분실업기금(프랑스), 조업시간단축제(독일) 등의 조치를 취하고 노조는 양보교섭을 수용하며 사측은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노사정 타협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협약은 경제위기가 계속되자 하나 둘 씩 무너졌다. 집권 여당인 스페인의 사

회주의 노동당은 올해 초 시민서비스노동자위원회연합(FSC-CCOO), 공공서비스일반노조 연맹(FSC-UGT), 공공독립노조동맹(CSIF)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약속했으나 재정 악화 속에서 이 모든 약속을 폐기하고 해고 제한을 완화하는 노동법 개악과 공공부문 임금동결 및 인원감축을 추진했다. 프랑스 역시 올해 연금 개악안을 추진하며 작년의 사회협약을 사실상 저버렸다. 이태리에서 역시 '소득 및 기술훈련에 관한 노사정 협약, 지방정부-사용자-노조 간 지역별 협약, 특별임금보장기금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협약이 맺어졌지만 올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세제 개악과 노조법 개악을 했다. 현재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총파업이, 이태리에서 역시 부분 파업과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공식 실업률이 10%를 넘어선 미국의 경우 지엠 파산, 크라이슬러 매각 등 자동차 기업들이 큰 위기를 겪는 가운데 그동안 실리주의 노선으로 일관했던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포드와 지엠 등에서 무쟁의 선언을 하고 수년간의 양보교섭으로 받아낸 퇴직자건강보험기금(VEBA)까지 사실상 빼앗기는 몰락을 겪었다. 오바마 정부에 대한 로비에 전력을 다했던 미국의 서비스노조(SEIU)는 노조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이었던 노동자자유선택법을 오바마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 내분과 부패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세계경제위기가 자본에게 신자유주의로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를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노동에게는 90년대 이후 선진국 노조의 주요 노선이었던 사회적합의주의(혹은 사회협약정치)와 경제적 실리주의로는 더 이상 노조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민주노총이 큰 틀에서 추진해 온 사회협약을 중심 전략은 철저한 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과 경제위기 속에서 사실상 이야기조차 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사회연대 혹은 복지동맹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파트너가 정부에서 야당으로 바뀐 것 외에는 기존 사회협약 전략과 차이를 찾기 어렵다. 진보진영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역동적 복지는 노동시장유연화와 복지를 맞교환, 기업에게는 구조조정과 해고의 자유를, 노동자에게는 범위가 넓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전략인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연 안정성과 비슷한 내용이다. 자본이 이야기하는 유연안전성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을 줄이는 전략으로 해고 상태에서 최소한의 소득과 구직을 위한 인프라를 보장해주는 정책이 골자다. 보편적 복지와 자본의 유연안전성 전략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면 전자가 세제 개편에 기반을 둔 소득 재분배와 수혜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를 강조한다는 점 정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연

대 전략은 정책 대안으로서 실현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점 외에도 현재 역관계에서 사실상 복지보다는 유연성만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다. 서구의 복지 제도는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사회주의권, 노동자운동의 격렬한 투쟁과 급진화라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계급 타협의 결과물이다. 타협의 물질적 기초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대중운동의 질적 확대 없는 '복지'는 언감생심일 뿐이며, 의회와 지식인들의 제도 설계에 우선권을 주는 현재 논의는 노동자 대중운동 확대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이제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주의를 변혁, 대안세계를 만들어 가는 노동자운동으로서의 지향을 분명히 밝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세계를 지향하는 노조 노선으로 사회운동노조주의는 중장기적 변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조 전망이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노조의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경제적 투쟁은 정당하지만 임금제도는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에 주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노동조합은 사회적·정치적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여기서 사회운동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옹호하지만 동시에 (전위 또는 의회)정당과 구별된다는 의미이며, 노동조합을 특정 모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대중운동조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다.

사회운동노조주의의 여러 조류가 있지만 핵심은 대중운동 내부에서 대안세계를 위한 새로운 '조건'을 확립한다는 기본 방향이다. 노동자 스스로가 실천과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통해 자기-통치할 능력을 배가하지 않는다면 결국 20세기 사회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는 평가에 기반을 둔다. 사회운동노조주의는 정치적 의제는 정당에 위임하고 경제투쟁만을 담당하는 노조, 당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노조를 지양한다. 노조 스스로 정치적으로 강화되지 못한 채 배타적 지지 방침을 고수하는데만 전력을 다한 지난 정치세력화 운동과 노조를 당의 세포 조직 활동 공간으로만 여기는 전위당 운동이 예다. 구체적 정세 조건에 따라 조직적 체계를 달리하며(산별노조 일수도 혹은 지역일반노조일수도 있다) 대중운동을 통해 제도를 바꾸고 또한 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큰 대중운동을 만들며, 노동자 스스로 통치할 조건을 만드는 노조노선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과 비슷한 문제들을 겪었던 남아공노총(COSATU)의 최근 혁신은 사회운동노조주의 관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남아공노총은 2005년 자신들이 지지한 타보 음베키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에 자극받아 내적 혁신을 단행했는데, 특히 2007년 폴로콰네에서 열린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그 동안 노총의 공식 노선이었던 코포라티즘적 정책-성장, 고용, 재분배 정책(GEAR)-을 폐지하고 다시 대중

운동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으로 돌아섰다. 2009년 경제 위기 과정에서는 이번 경제 위기를 국면적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노조의 대중적 힘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출, 노총이 파견한 의회, 노동자지주회사의 간부들에 대한 소환권 강화와 활동가의 이념 교육 강화, 조직 민주주의 강화 등을 결의했다.

한편,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정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 하나는 정파 갈등이라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라는 문제다. 역사적으로 존재한 여러 정파들의 갈등과 집단적 감정들은 민주노조운동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각과 노선을 달리 하는 그룹이 조직을 만들어 대중운동에 개입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대중운동을 확대하는 장애가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파 갈등 문제 또한 대중운동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의 정파 갈등이라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이 대중적인 노선 토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파 간의 경쟁이 결국 노조의 집행부를 장악하는 문제로 치환되거나 현직 집행부를 비판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강화와 정파 문제 해결은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닌 셈이다.

이러함 점에서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정립이라는 과제가 실천적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노조 교육 시간 확보부터 중요해 보인다. 조합원이 노동운동의 기본적 교양을 쌓고 상호 토론하는 지적 운동 없이 민주노조운동이 이념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은 공염불일 뿐이다. 80년대 90년대 초반의 민주노조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 투쟁과 일상 활동에서 노조 교육 토론에 대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긴장감이 필요하며, 노조 단협을 통해 충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노조는 이를 실제 교육 토론에 이용해야 한다. 한 예로 이탈리아에서 1970년대 노동운동을 이념적 수준에서 강화한 기초 중 하나는 1972년 임금손실 없이 연 150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단체교섭이었다. 이 시간을 통해 노동자들은 학교나 기업 기술 교육에서 배울 수 없었던 급진적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이는 토론하는 노동 문화로까지 이어졌다.

2008년 민주노총이 조사한 단협 상 노조 교육 시간은 평균은 연 14.3시간이었으며, 이 시간 중 실제 교육 시간은 31%에 불과했다. 노조 교육 담당자를 전임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교육담당자가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30%가 되지 않았다. 단협 상의 유급학습휴가 혹은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추가 확보, 노조 교육 예산 및 담당자 확보 등에 전략적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든 언제 이를 추진해 볼 것인가의 문제다.

2) 조직적 과제 : 지역운동 강화, 초기업노조운동의 혁신

90년대 중반 이래 민주노조운동진영의 조직적 혁신 논의는 초기업노조운동과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방안을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자를 관통하는 조직 체계로 산별노조 건설 운동이 있었다.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공공서비스노조 등은 조직 전환을 이루어 낸 대표적 사례들이다. 하지만 최근 금속노조는 완성차 기업 지부의 지역지부전환 및 중앙교섭 성사 문제로, 공공노조의 경우 공공노조가 애초 목표했던 통합 공공운수노조 건설 지체 문제로 큰 위기에 처해있다.

산별노조 운동이 위기는 무엇보다 산별노조 건설 과정이 대중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과 함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속노조의 예를 보면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자동차연맹, 현충련이 어렵사리 1998년 금속산업연맹을 만들었지만 연맹 출범 직후 현대차 정리하고 저지 투쟁이 사실상 패배로 마무리 되며 조직을 냉각시켰고, 2000년 금속산별노조 건설 방침을 결정하고 2001년 3만 조합원이 전국금속노조를 먼저 출범시키며 나머지 조직의 산별 전환을 추진했지만, 바로 다음해 대우차 해외매각 저지 투쟁이 패배하며 산별 전환 운동이 다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2006년 다시 여러 논쟁 속에서 15만 금속노조를 출범시키며 2009년 기업지부 해소를 결의했지만 어정쩡하게 끝나버린 2007년 한미FTA투쟁, 그리고 2009년 쌍용차 투쟁 패배로 완성차 조합원들을 지역지부 전환으로 이끌 대중운동적 힘을 소진했다. 자본과 정권이 굳이 산별노조의 집단 교섭 체계를 반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교섭 체계 전환, 조직 전환의 결정적 시점들을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한 것이다.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산별노조에 대한 대중적 동인 약화가 크다. 공공부문의 노조들은 9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임금 통제로 민간기업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임금을 정상화시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이러한 공동 투쟁 속에서 1999년 공익노련,(구)공공연맹, 민철노련이 공공운수연맹을 결성했고, 2006년에는 공공운수연맹, 화물통준위, 민주택시, 민주버스가 산별노조 건설을 결의, 이후에는 부족하게나마 운수노조와 공공서비스노조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98년 이후 민간 부문 임금의 정체와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코포라티즘적 대응으로 민간부분에 비해 오히려 공공부문 임금과 고용안정 수준이 점점 높아져 임금 고용 문제에 관한 공동 투쟁의 동인이 낮아졌고,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대규모 민영화 계획도 사라지며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한 공동 투쟁 동인 역시 약화되어 갔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과 임금 유연

화 정책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 이해가 되기도 했으나, 대규모 정리해고가 아닌 추가 고용에 대한 감축과 조기 퇴직 확대, 임금 유연화 등을 통한 미시적 구조조정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권의 고강도 탄압을 감당할 만큼의 투쟁을 발생시키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금속노조는 조직발전특위를 통해 중앙교섭체계를 다층적 방식으로 유연화하고, 조직 체계는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전환 시에도 대표지회를 통해 기업별 운영 및 교섭 체계를 부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기존 조직체계를 한동안 유지하며 우선 운수노조와 공공서비스노조의 재정과 운영을 통합, 기업을 넘어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을 10월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조직 발전 전망을 논의해 가며 전략적으로 강조할 바다. 첫째는 3만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에 걸친 금속 노조 경험과 5년에 걸친 공공서비스노조의 경험에서 얻은 성과인 지역지부를 통한 지역연대투쟁의 축적과 지역에서 펼친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매년 지역연대과업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심지어 산별을 넘어서까지 지역연대를 확장했던 수년간의 예나 공공서비스노조 서경지부가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청소미화원 노동자의 인권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며 조직화에 성공한 예 등은 초기 업노조운동으로 만들 수 있는 성과였다. 조직 발전 전망은 이들 운동들이 조직의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집중 방안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이들 운동들에 대한 의미 부여, 전조직적 성과 공유, 재정과 인력을 집중하여 이들 운동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교섭과 조직체계를 그럴싸한 설계도로 그리는 것보다는 중요한 운동들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산별노조가 지역지부운동과 동시에 기존 대기업 노조들의 혁신을 어떻게 도모했는가에 대한 평가다. 금속노조나 공공서비스노조나 이 점에서는 좋은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은데, 산별노조 운동이 기존 대공장 운동을 혁신해 나갈 계기들을 많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기업지부의 지역조직들은 지역지부 회의에 참석하여 함께 사업 집행과 연대를 고민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지금까지 거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은 한 단면이다. 조직 발전 전망에서 다시 한 번 평가해 봐야 하는 것인데 산별노조가 교섭 제도화를 위한 설계도가 아니라 초기업노조로 나아가는 '운동'이라고 했을 때 금속 기업 지부나 공공 대형 공공기관 노조의 지역 편제 문제 이전에 이들의 운동의 지역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현재 산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직 편제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 내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지역지부운동의 모범을 더욱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대공장 노조들이 지역운동을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회운동노조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중운동의 강화와 혁신은 선협적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동의 끊임없는 개조 속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산별노조가 어느 정도 꾸러지며 한 편에서는 총연맹 위상과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 특히 총연맹 임원 직선제 논쟁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산별노조 완성 정도에 따라 총연맹은 정책과 정치세력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독일노총(DGB)과 산별노조의 관계를 정세와 무관하게 일반화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전후 복구 과정에서 자본은 기존 사회주의 경향 노동운동 세력의 확장을 막고 노조의 정치적 역량을 차단하기 위해 총연맹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산별노조에 모든 실질적 권한을 주되 단협투쟁에 묶어두고자 했다. 독일노총은 이 과정에서 법률상담, 직업교육, 정책 개발과 같은 특수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산별노조 역시 이후 정치적 역량 강화보다는 단협 투쟁에 경도되는 경우가 많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코포라티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국가를 보아도 총연맹이 정책 개발 정도만 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세적 조건과 역사적 과정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권에 맞선 전국적 파업과 노조 조직화, 그리고 정치세력화 운동에 나선 브라질 노총(CUT)이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전선 투쟁을 펼친 남아공노총(COSATU), 총연맹이 중앙 정부,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이탈리아노총(CGIL) 등 역동적 대중운동을 펼쳐왔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총연맹이 여러 수준에서 전체 노동자투쟁과 전국적 교섭을 담당해 왔다.

반노조 정책이 일반적인 한국 정치 현실에서 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민주노조운동 확대에도 필수적 요소다. 물론 현재 민주노총의 경우 산하 연맹 노조에 대한 지도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 전국적 투쟁전선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공공노조, 운수노조)을 포함한 주요 산별노조 간에 공동기획과 공동투쟁의 원칙과 기풍을 먼저 다시 만들어야 한다. 산별노조의 시기집중 임단투조차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어떻게 투쟁동력을 형성할 것인가가 중요해 보이며, 대중운동이 실제로 진행되는 지역에서 지역연대운동의 구심으로서, 총연맹 활동의 집행기구로서 지역본부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관건

일 것이다⁵⁾.

3. 저성장-경제 위기 반복 상황에서의 투쟁 과제 : 연대임금-대안세계화 운동

1) 최저임금투쟁의 확대재편을 통한 연대임금 투쟁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의 전략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에 집중되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자본이 취하는 전략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본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노동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고, 이를 기존 노동자들이 수용하도록 실업자와 취업자의 갈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을 조장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앞으로 저성장 속에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발발한다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을 보더라도 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 전략의 핵심은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와 단시간 근로 확대, 민간고용서비스업 확대와 파견업종 재조정이다. 정부 전략은 탄력적 근로시간을 통해 경기변동이나 생산 조정 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노동시간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시간에 노동을 집중시켜 시간당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효율적 시간에는 저임금의 단시간 노동자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업을 대형화해 지금도 공공연히 진행되는 불법 파견을 파견법 손질 없이 준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고용전략은 이 모든 원인으로 현재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으로 인한 노동시장이 경직성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노동자 간 갈등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자본의 전략에 맞선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은 현실 가능한 공동 요구안을 통해 공동 투쟁과 집단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 사실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자본과 노동이 win-win하는 경우란

5) 총연맹 지역본부 예산을 한 예로 들어보자. 한국 금속노조의 예를 들면 금속노조 수입 중 7.6%가 총연맹 납부금으로 올라가고, 이 7.6%의 43%가 지역본부 예산으로 교부된다. 사실상 금속노조 예산의 3.3%만이 금속노조 지역지부와 함께하는 지역본부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탈리아 CGIL의 경우를 보자. 금속노조(FIOM)는 조합비를 총연맹에서 교부받는 형식으로 예산을 받는데, 금속노조 조합비는 1%가 총연맹 예산으로, 9%가 총연맹 지역본부로, 16%가 총연맹 지구지역협의회로 분배된다. 이탈리아 금속노조 전체 예산의 25%가 총연맹 지역본부에 사용되는 것이다.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 정책 대안을 통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자면 “노동자들의 투쟁은 때때로 승리하기도 하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성과는 노동자들의 확대되는 단결뿐”인 상황인 셈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진영의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하지만 이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경우 모두가 인정하는 주장임에도 기간제법,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을 크게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현실 역관계 상 쉽지 않다. 더군다나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참여도가 지극히 낮은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목표와 현실 운동의 괴리, 현실 운동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단결하는 매개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민주노조운동의 기존 조직 노동자들과 더 많은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투쟁들, 매개들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노동시간유연화를 먼저 막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과 공명하며 기존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와 저임금 일자리만 만들 공산이 크다.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된 2004년부터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까지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6.3% 정도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30%가 늘어났다. 그 기간 대규모 설비 개선이나 생산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이 생산성 향상 대부분이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노동강도가 23%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노동강도로 줄어든 시간은 한 편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이 채우고 다른 한 편에서는 기존 노동자들이 수입 확대를 위해 초과근로로 채웠다. 물론 자본 입장에서 보면 이 신규 비정규직 고용과 초과근로 비용은 늘어난 생산성에 비해 작은 것이다.

한편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산성 대비 임금이 줄어든 것이다. 저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강화된 노동강도로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 상여금, 수당이 적은 비정규직은 노동 시간 증감에 따라 실질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서 더 크게 증감하는데,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한 2009년을 보면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 4시간 가까이 줄어든 월 노동시간이 주된 이유였다. 바소(Pietro Basso)는 80년대와 90년대 프랑스와 독일에서 실시된 주 노동시간단축이 결과적으로는 도요타식 노동강도 강화, 교대제와 주말근무의 확대로 이어져 사실상 자본의 노동시간 재조직화와 외주화에 협조한 꼴이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노동시

간 유연화를 막고 실질 임금 상승을 동반한 노동시간단축이 아닌 한 정규직 비정규직, 대공장 중소기업 노동자의 단결에 그다지 좋은 매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로도 별반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이전에 최소한 정규직 비정규직, 대공장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혀보는 공동 투쟁이 먼저 필요한 듯 보인다. 소위 연대임금 투쟁이라 부르는 것이다. 고용 유연화, 시간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역전시킬 만한 정치적 힘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선은 현실 가능한 공동 임금 투쟁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연대임금은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물가연동제, 스웨덴 모델 등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된 이탈리아 물가연동제는 물가연동 표준 임금⁶⁾(1974년 2,389 리라)을 소비자물가(1974년 8월-10월을 100으로 기준) 인상만큼 상승시켜 그 정액 인상분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 전체 임금 평균이 82년에는 74년 대비 250% 이상 오르고 임금 격차도 크게 축소했다. 이탈리아 물가연동제는 1993년까지 이어지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유럽화폐동맹 가입에 따른 물가인상장제 압력, 상대적으로 고임금 교섭이 가능했던 자동차노조와 철도 독립노조 등의 반발 등으로 폐지되었다. 스웨덴 모델은 1950년대 물가 인상과 수출 대기업 경쟁력 저하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억제,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 대규모 복지 정책, 한계기업의 퇴출과 구조조정, 정부의 적극적 완전 고용정책 등을 핵심으로 한다. 총연맹의 중앙교섭권, 고임금 노동자 임금을 저임금노동자에게 이동시키는 임금유동(wage drift)와 임노동자기금 등이 핵심이었다. 스웨덴 연대임금모델은 1983년 총연맹 중앙교섭을 사용자단체가 거부하고, 고임금 노동자층이 이탈하면서 붕괴했다.

이탈리아의 물가연동제는 공동의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자운동의 강화를 꾀했던 전략이었던 반면,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는 산업구조조정의 대가로 평등 임금을 확보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인 측면이 강했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수직적 하청 생산이 일반적인 한국에서는 공동의 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 격차 완화와 노동자 단결의 계기들을 찾는 것이 옳아 보인다. 이미 몇 년 전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 기금 조성이 이야기된 적이 없으나 오히려 정규직들의 반발만 샀던 경험도 존재하며, 한국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이란 중소기업

6) 평균 임금이 아니다. 표준 임금은 당시 노사정 교섭으로 만든 기준이다. 이후 1980년, 1983년 기준 임금이 노사정 교섭으로 바뀐다. 제도적 임금 보호와 노총의 교섭이 혼합된 모델인데, 노총 교섭의 핵심은 기준임금과 물가인상분 반영 제한선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비용 절감 이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현실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는 것은 탁상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현실에 존재하는 제도와 현존하는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힘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내용은 최저임금-전조합원 임금인상 요구액을 공동의 정액인상요구안으로 맞추어 투쟁해 보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임금요구안부터 산별노조(연맹)까지 임금인상액과 최저임금인상액을 동일 액수로 맞추고 6~7월에 최저임금투쟁을 '국민임단투' 다운 투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 2010년의 예를 들면 민주노총 임금 요구안인 월임금총액 33만9천원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로 최저임금인상액을 요구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올해 요구안보다 약 10만 원 정도가 높은 액수인데, 핵심은 액수보다도 조직 노동자와 최저임금영향에 있는 노동자들이 공동 임금 요구안을 내걸고 함께 싸우며 임금 격차를 축소시킨다는 최저임금투쟁 틀의 전환에 있다. 최저임금투쟁의 위상을 대폭 확대하고 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한국식 연대임금 투쟁의 방식을 찾는 것이다.

최저임금투쟁을 전체 노동운동 차원에서 투쟁으로 쟁취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그리스다. 그리스는 총연맹과 전국사용자단체가 2년 마다 전국 교섭(EGSSEs)을 벌여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정부는 협상 중에 개입하지 않으며, 협상이 결렬 되었을 때 최저임금인상액을 권고 정도 한다.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2009년 12월에는 최저임금 8.1% 인상 요구를 들고 민간부분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으며, 올해 재정 긴축 반대 투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핵심 요구안 중 하나였다. 그리스 노동자 운동은 투쟁을 통해 2000년 평균 임금 대비 37%이던 최저임금을 2008년 41.3%까지 끌어 올렸다.

물론 현재와 같은 한국의 최저임금투쟁 현실에서 이는 아직 언감생심이다. 가을 이전에 집중 임단투를 벌이는 단위는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정도이고, 공공운수연맹이나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은 시기집중 임단투는 물론 몇 년째 임금투쟁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권 이후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산별중앙교섭이 매우 불안정해져 시기집중 조건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금속의 경우 지역집단교섭도 대부분 열리지 못했다. 그리고 금속노조의 경우 작년까지 중앙교섭에서 법정최저임금보다 높은 산별 최저임금을 타결해 법정최저임금투쟁에 대한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투쟁을 할 경우 여성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일부의 투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무엇보다 최저임금투쟁을 한국식 연대임금투쟁으로 만들어가자는 내부의 토론

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몇 년째 임금 동결 상태인 공공기관, 공무원, 전교조 등은 최저임금인상 만큼 임금을 동시에 올리겠다는 역발상이, 사실상 최저임금영향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미조직 상태인 금속노조는 법정최저임금을 통해 2만 수준의 협약을 제조업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결의와 공단 및 2~3차 부품사, 사내하청 조직화에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예들 들면 기업별 보충 교섭에서도 경총 소속인 기업에게 경총에 총연맹 법정최저임금 인상에 합의할 것을 압력을 넣도록 하는 등 산별, 지역, 기업 수준에서 다양한 전술이 필요할 것이다.

2) 자본주의 변혁과 대안 세계화 운동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는 지금까지 이야기되던 정책 대안들을 점점 더 실효성 없는 것들로 만들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정부 재정 정책에 관한 것이다. 재정 정책의 핵심은 유효 수요 부족을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 성향 증대를 통해 해결하면 수요와 공급의 확대 순환이 이루어져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단순히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생산성 자체가 현격하게 저하되어 있는 가운데 금융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오던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 진 것이 원인이다. 즉 생산 자체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재정 정책이 국가 부도가 우려될 정도의 재정 위기로 되돌아오고, 미국의 통화, 재정 정책이 실물 경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남미의 증권 투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에 계급적 단결을 다시 도모하기 위한 중단기적 시도로 연대임금 투쟁이 있다면, 국제적 수준에서 노동자운동의 세력화와 자본주의 변혁을 도모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은 중장기적 과제다. 반주변부 수출 중심의 국가인 한국에서 자본주의 변혁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임계치는 일국적 수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일부에서는 내수 중심 경제로 경제 체질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1950년대 이후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이 수입대체산업화로 불리는 내수 주도 산업 전환을 추진하다 결국 외환위기를 겪으며 더욱 강하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한 예를 보아도 이는 쉽지 않는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천연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세계화 된 현재 경제 체제에서, 그것도 경제 위기 과정에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은 자본주의 변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일 것이다.

노동자의 정치가 부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유럽이나 남미와 같은 대륙이 존재하지 않고, 한반도 분단이라는 조건과 미약한 중국, 일본의 노동자운동 등은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다만 한국 민주노조운동이 좀 더

국제적 사회운동에 친화적인 형태로 변화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제담당자의 국제회의의 참가와 초국적 기업 구조조정에 원정투쟁을 떠나는 것이 대부분인 한국 민주노조운동에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유무역협정, G20, APEC 투쟁 등의 국제적 의제에 대한 전략적 투쟁과 토론,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국제적 사회운동 흐름에 대한 적극적 동참, 로비조직화 된 국제노동조직(ITUC, IMF 등)을 넘어선 투쟁하는 노조 간의 중장기적 연대와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와 공동 대응은 현 정세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다시 논의되고 있고 한-EU자유무역협정이 비준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된 국가들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 조만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데,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쉽게 볼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환율전쟁 논란에서 보이는 것 같이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보호무역 정책이 확대되면 무역협정을 통한 거래들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지역적 거리 때문에 다소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재산권 관련 조항들과 금융 자유화 확대, 그리고 수출품과 수입품의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과 초국적 기업들의 생산 재배치 등이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로 한-EU자유무역협정은 발효 즉시 자동차 부품 관세를 철폐하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십 개의 유럽부품업체들은 당장 공장 폐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생산 설비를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외 공장으로부터 부품 수입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대비한 생산 능력 여유를 최소한도로만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북미자유협정 이후 캐나다의 완성차 부품사 기업들이 그러했다.

초국적 기업의 자본 철수와 구조조정은 더욱 심각하게 한국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작년부터 올해까지 쌍용차를 비롯하여 공장을 폐쇄한 발레오공조부터 자본 철수 압력으로 노조를 파괴한 발레오만도, 대규모 해고와 임금삭감을 단행한 캐리어, 만도위니아 등 초국적 자본에 의한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에 의한 국외 현지 노동자들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다. 최근 인도 현대차, 포스코 사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사태가 벌어지면 대응하는 현재의 투쟁 방식은 초국적 자본의 이동성으로 인해 효과를 보기 힘들다.

자유무역협정, 초국적기업의 이동은 자본이 세계화하는 핵심 고리 중 하나다. 그 만큼 이를 막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나 초국적기업의 이동에 대한 해법은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자본만큼 세계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양국의 노동자들이 진지하게 토론하며 대중적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무역이 필

요하다면 그 무역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 협정의 변화와 양국에서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대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제노동조직들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총연맹, 산별노조(연맹)의 만남을 좀 더 다변화하고 전략적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듯하다. 예를 들면 2~3년 전부터 브라질 CUT와 프랑스 CGT가 양국에 서로 진출해 있는 초국적 기업의 단체교섭, 사회적의무, 최저임금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전략적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2010년에는 CUT, CGT는 발레오, 패넥스, 미쉐린, 까르푸 등 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실적 방안까지 토론을 시작했다. 일종의 양자간 투쟁협정(?)인 셈이다. 한EU자유무역협정, 한국에 진출해 있는 프랑스 독일의 초국적 기업들 등의 문제에 대해 유럽 각국의 총연맹, 산별노조, 그리고 해당 기업노조(지부, 지회)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 하에 전략을 토론하고 또한 대중적 교류를 넓혀가는 것을 시작할 때가 됐다.

참고로 대안세계화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던 세계사회포럼(WSF)은 20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몇 년간의 침체를 딛고 다시 확대 강화되어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계사회포럼은 2007년 이후 정체되기 시작해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운동이 계속되기 힘들다는 평가도 이곳저곳에서 나왔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계사회포럼을 주도해 왔던 남미의 노동자 대중 운동이 침체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00년대 남미 여러 국가에서 탄생한 중도좌파 정권들은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사회운동을 국가 정책 내부에서 관리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⁷⁾ 하지만 작년 세계경제위기 한복판에서 개최된 2009년 벨렝 세계사회포럼이 15만 활동가들의 참가 속에 성대히 개최되는 등 변화의 조짐 역시 나타나고 있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사회포럼은 2000년대 등장한 가장 의미 있는 국제적 운동이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세계사회포럼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조직해야 한다.

3) 개악 노조법 대응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와 내년부터 시행될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문제는 민주노

7) 페트라스에 따르면 이들 국가 정부들은 대중운동을 탈급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사회복지·위기관리 정책을 도입한 뒤, 경제회복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①규제되지 않은 자본(특히 투기자본)에 대한 반대 ②호혜적이지 못한 자유무역협정(가령 FTAA)에 대한 반대 ③농산물-광물 수출 부문에 대한 증세 ④강력한 코퍼티즘적 경향(운동 지도부와 조직을 국가기구에 통합) ⑤미국을 제외한 지역통합 조직(UNASUR) 지지 ⑥무역 및 투자 다변화 전략 등이다.

조운동 진영의 대응 여부에 따라 큰 위기가 혹은 재도약을 위한 결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유급 전임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는 앞으로 시행이 더 될수록 전임자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조 간부의 활동 전반을 민주노조운동과 분리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사실 현재 유급 전임자로 인한 비용 문제로 자본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유급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범위까지 다루는 타임오프제의 최종 목표는 노조 활동가들을 기업 내 노사관계에 묶어두는 것이다. 산별 교섭 체계를 무력화하고 기업에서 노조 생존을 위해 복수노조 간 실리 경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이 보다 더 심각하게 노조의 체질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조직력이 약한 사업장의 경우 사측이 어용노조를 조직해 민주노조의 교섭권 자체를 제약할 여지도 다분하다.

비슷한 사례로 잠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전후 전국적 파업 물결 속에서 1947년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테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노조 내 공산주의자를 숙청하고 당시 파업을 주도하던 산별 노조의 기본 '역할'을 바꾸기 위한 법이었다. 이 법은 산별노조 차원의 연대파업과 정치파업을 규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문제는 이에 대해 미국 자동차노조들이 법의 정착과 경제적 실리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거래의 내용은 산별노조가 법 정착에 협조하는 대신 정부는 자동차 기업들의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성과만큼 임금 인상에도 협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완성차와 대형 부품사 조합원들은 매우 큰 임금 인상을 얻었다. 하지만 이후부터 산별 차원의 투쟁이라는 것은 아예 사라져 버렸고, 이후 기업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부품사 노동자들은 모두 노조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이후 미국 자동차노조는 우리가 비즈니스 노조주의라 부르는 극단적 실리주의 노조로 경도되어 갔다.

이는 올 해 타임오프투쟁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보인 모습과 흡사한데 무엇보다 개약 노조법에 대해 조합원들과 함께 초기업적 차원의 대응 그리고 민주노조의 기본 방향을 합의해 나가는 투쟁이 아니라 밀실 협상을 통해 실리를 주고받는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단협을 최대한 유리하게 유지하고, 수당을 통해 조합비를 올려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장의 성과일 수는 있으나 자본이 2~3년 내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노조 활동가들을 철저하게 기업 내부 노사관계 수준에서 묶어두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초기업적 노조운동과 민중연대 활동에 대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만들지 못한다면 앞으로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에서부터 무급 전임자 수까지 사측이 매년 걸고넘어질 때마다 양보교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노조에 반대하는 복수노조까지 존재한다면 그로 인한 압박

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조법 재개정이 당장은 쉽지 않은 만큼 산별노조와 기업노조들에서는 조합비 인상을 통해 이후 무급전임자까지 활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금을 미리 조성하고, 초기업노조운동과 민중연대 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조직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개악 노조법 투쟁은 이 번 기회에 민주노조 운동의 방향을 조합원 모두와 함께 토론해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는 한 탈출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참고로 2012년 총선 대선에서의 집권 세력 교체에 기대를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1980년대 영국에서 수차례의 노조법 개악이 진행되었을 때 영국노총(TUC)이 노동당 재집권에 기대를 걸다 결국 대처 정부에 호되게 당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영국 노동당보다 오른쪽에 있고 집권 기반도 약한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편이 낫다.

4. 나가며

오늘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곤란한 도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운동의 위기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도 여러 번 경험했던 것 같은 패배의 위험만이 문제는 아니다. 지난 민주노조운동의 유산이 완전 소멸할 수도 있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본 글에서는 부족하게나마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지향으로 사회운동노조주의를, 현실적 조직체계로 산별조직체계 논쟁의 연착륙과 지역운동 강화형 조직 건설을, 투쟁과제로 연대임금과 대안세계화 운동, 사회운동적 방식으로의 노조법 대응을 이야기했다. 실현 가능해 보이는 정책대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당장 실현 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일들은 지지자들이 적은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자기 통치와 대안 세계를 위한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인가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다.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임계질량을 구성하기 위해 노동자 단결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노동운동 지형변화에 따른 운동방향의 재정립

김태연(노동전선 집행위원장)

Since 1995... 1995년 11월에 민주노총이 창립되었다. 자본과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신노사관계'를 기치로 내세우며 대 노동운동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이후 만 15년이 지난 2010년, 자본과 정권은 전임자임금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를 제도화함으로써 15년 공세의 종지부를 찍었다.

노동운동의 약화는 일시적 침체인가? 장기간의 퇴조인가?
노동운동 침체든 퇴조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반전의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의 노동운동체제, 운동방식은 유효한 것인가?
새로운 대안은 있는 것인가?
그 길목에서 활동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5년 공세 결과 노동운동은 엄청나게 변화된 조건에 처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 즉 착취구조의 변화이다. 자본의 착취방식이 변화했고, 노동계급의 구성과 대응방식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 변화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운동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큰 변화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투쟁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이다. 노동조합의 투쟁력 약화, 조직발전전략으로 삼아왔던 산별노조 실패라는 주체적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파업권이 약화된 데 이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적 단일화 등 객관적 조건의 변화가 초래할 노동운동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의 지향, 운동주체의 주요 구성부분인 선진노동자 및 활동가층의 변화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1. 민주노조운동의 조직·투쟁을 둘러싼 조건 변화와 전망

—단결권, 파업권 쟁취를 위한 제2의 노동3권 쟁취투쟁 시작해야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 자신의 고유한 과제도 산적하다. 자본주의 위기전가에 따른 고용공격의 상시화,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공격,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 등이 노조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1) 투쟁의 재구성

민주노총의 총파업전선은 완전히 와해된 상태이다. 산별파업 역시 와해되고 있다. 공무원, 전교조는 제도적으로 파업 불가능한 조직, 사무는 역량상 파업불가능 조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임단협이나 민주노총 지침에 따른 산별파업을 실시한 조직은 금속, 보건 정도이고 두 조직의 파업투쟁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10년 금속의 경우 현대차, 대우차 등 주요 대사업장은 아예 파업 가능사업장에서 제외되었고, 기아차 역시 무파업으로 임단협을 종결했다. 조선, 철강 등은 이미 오래전에 파업 불가능사업장으로 치부되고 있다. 중소기업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파업은 경주와 부산이 집중 타격을 받고 근거지를 상실하고 있는 상태이다.

파업전술 측면에서도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일상적인 임단협 투쟁이 아닌 구조조정·정리해고 저지투쟁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국가폭력에 맞선 공장점거투쟁으로 격화되기 마련이다. 사실상 전쟁과 같은 결의로 파업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조건이다.

공장점거 파업이 어려운 조건인 반면 공장을 비우고 가두로 나와야 하는 파업의 경우는 주체적인 이유로 후퇴하고 있다. 총자본을 상대로 하는 정치파업의 경우는 공장점거보다는 다수의 대중이 가두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정치파업에 합류한 노조들이 조합원 대중을 가두투쟁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

가두투쟁 역시 어려운 조건을 맞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공권력의 가두시위 대응전술이 매우 체계적으로 발전한 반면 노동운동의 대응전술은 내우 취약하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이는 집회가 숫적으로 보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님에도 경찰의 거리투쟁 봉쇄선 내에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여 대중투쟁의 발전이 정체되고 식상한 집회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중파업과 가두투쟁을 결합하는 전통적 투쟁전술이 이제는 무망한 것인가? 다른 전술대안이 있는가? ‘대중파업-가두투쟁’을 보완하는 보다 풍부한 전술을 개발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특히 좌파적 관점에서 보면 파업과 가두투쟁 이외의 투쟁방안이 퍼포먼스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투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정세조건에 따라서 비폭력적인 투쟁전술 가령 1인시위, 삼보일배까지도 유의미한 투쟁전술이 될 수 있다.

가두투쟁의 경우 ‘전투’에 매몰되는 좌익적 오류에 빠져들어서는 안된다. ‘전투’는 가장 정세적인 것이다. 대중의 분노와 상대의 폭력적 대응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운동전반의 현재 상태는 대중적 분노가 충전하고 경찰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에서도 선도적 투쟁이 저지되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투쟁전술에 대한 근본적 태도변화가 있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무장하지 않으면 선도투가 아니거나 선도투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주체적 조건으로 볼 때 당분간은 10여 년 전처럼 무장하고 투쟁할 역량도 매우 취약하다. ‘연행을 각오하고 맨 몸으로 싸우자’는 주장을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정치파업의 기초는 지역 차원의 연대파업이다. 산업별 조직이 임단협을 중심으로 교섭과 조정과정을 거친 파업을 주무기로 하고 있다면 지역은 정권의 노조탄압에 대한 동조파업 형태의 지역 총파업을 실험하고 있다. 이런 일상화되지 못하면 전국적 정치총파업 역시 어렵다. 이 투쟁전술을 그간의 실험을 토대로 보다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보면 총연맹 차원에서 지역총파업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재원을 배치토록 해야 한다. 산별조직의 지역조직의 파업권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2) 파업권 봉쇄선을 뚫어야

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부터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노동악법 개정투쟁으로 기선을

잡고 일정한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공세기에 무노동무임금의 범제화 -> 작업장 점거파업 제한 -> 필수유지업무 등을 거치면서 노동법상 파업권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여기에 불법파업 손배소송 및 가압류 확대로 합법적 파업의 극도로 위축되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지난 15년간의 공세 결과 파업권이 전면 봉쇄되었다. 교사, 공무원노조의 합법적 파업권은 아예 없고, 공공부문 핵심사업장들은 모두 필공사업장으로 묶이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투쟁전술인 파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는 합법적 투쟁에 안주하는 노조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하는 원인이 되어, 파업투쟁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한계를 뛰어 넘어 투쟁하자'. 이는 옳다. 그러나 대중투쟁에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필공사업장 등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부문은 제2의 노조건설운동 차원으로 파업권 쟁취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전교조 합법화 과정에서 길을 잘 못 든 덕분에 공공부문 노조들은 '파업불가능'으로 제도가 고착되고 있는데, 노조는 무대응이다. 파업권 없는 합법노조의 한계를 이제 충분히 확인했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제2의 조직건설을 선언하고 파업권 쟁취투쟁에 나서야 한다.

3) 타임오프제와 단결권 위기

8월 31일 기아자동차지부의 잠정합의로 2010년 타임오프제 투쟁은 사실상 끝났다. 7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공공부문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서 타임오프제가 관철되었다. 규모가 큰 노조의 경우 전임자수가 현저히 줄었다. 타임오프제가 겨냥하고 있는 대기업노조 무력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8월 31일 기아자동차지부는 2010년 임단협을 잠정합의하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임금인상안 61.76%, 단협안 58.44 %의 찬성으로 결정했다. 타임오프제에 따라 유급전임자를 21명으로 했고, 무급전임자 150명에 대해서는 조합비 공제수당 15000만원을 신설하여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그것을 노조가 다시 거두어 전임자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도합의했다.

금속노조는 한편 타임오프제를 상회하는 합의를 한 사업장이 116개라고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체로 기아자동차지부와 비슷하다. 즉 단협상에는 타임오프 한도 내로 유급전임자를 정하고, 별도합의(이면합의) 형식으로 수당신설 등의 방식으로 무급전임자의 임금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금속사업장도 사실상 단협상으로는 타임오프제가 대체로 관철되었다. 별도합의의 핵심도 노조가 전임자임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과도기적으로 그 재원을 사측이 간접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공식적으로는 타임오프제가 관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면

합의는 3년 후 자본측이 유리한 고지에서 공세를 펼 부문으로 남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작년 12월 총파업, 금년 4월 총파업, 6월 총파업을 내세웠으나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 결국 무너진 민주노총의 타임오프 투쟁전선은 해당 사업장으로 분산되었고 주요하게는 기아자동차로 이동했다.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전선이 붕괴된 상황에서 기아자동차지부의 타임오프저지 투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아차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타임오프제 한도를 명시적으로 넘어서기 위해 파업투쟁으로 자본을 압박하면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투쟁을 강제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현대기아차 그룹은 비정규 착취의 표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표적 노동탄압 재벌'로 공세를 펼칠 기회가 마련되었다. 즉 '타임오프제저지사내하청 정규직화'를 하나로 묶으면서 기아자동차지부만의 고립된 투쟁을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결국 사측의 '돈잔치', '주식잔치'라는 단기적 당근책에 전임자체제 붕괴라는 중장기적 후퇴를 하게 된 것이다.

한국노총 사업장, 노조의 힘이 미약한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제로 인해 전임자수가 약간 줄어들었으나 심대한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사업장 노조는 물론이고, 그동안 노조활동이 활발한 중소기업장 노조는 타임오프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즉 타임오프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약화를 초래해 양노총 체제(또는 3노총 체제)를 고착시켜 자본과 정권의 분할전략이 큰 비용없이 먹혀들어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뒤늦게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선언하고 2011년 40만 총파업 투쟁을 한다는 안을 내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이 안은 그냥 의례적인 것은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의 야권단일화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와 연결되어 있다. 최근 5야당과 범개정안 준비를 논의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2011년 이것을 토대로 야권단일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대선 공조로 가려는 것이다.

동상이몽일 수 있으나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노동법 재개정 투쟁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그 방향은 정치적으로 교란될 것이다. 이 교란을 저지하고 제2의 단결권 쟁취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당분간 현장은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노조상근 체계에 안주해 온 노동운동은 활동가들의 현장활동을 요구하는 조건에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노조질서를 넘어서는 현장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변화된 정세를 주목하고 대응해야 한다.

4) 2011년 복수노조 체제 산별노조위기를 새로운 산별노조건설운동의 계기로

그간의 산별노조운동은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업별 노조연합체에서 한발도 못나가고 있고, 금속노조는 대공장의 기업별 노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귀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해당 산업 노동대중의 절실한 요구를 기반으로 한 공동투쟁을 경유하지 못한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만들고 나서 투쟁을 하고자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이다.

결사의 자유보장을 기치로 한 노동 측의 공세로 시작한 복수노조 문제가 막판에 와서 자본 측의 뒤집기가 되는 형국이다. 자본 측은 무노조 전략 유지, 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조직화 차단, 어용노조 보호 등의 입장에서 복수노조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복수노조 인정 자체를 거부하기 어렵고, 전임자임금 지급중단과 맞바꾸면서 그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는 소수노조가 사실상 노조역할을 못하게 할 것이다.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면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노조의 파업권이 봉쇄된다. 따라서 노동3권 중 교섭권과 파업권이 없으므로 노조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소수자에게는 사실상의 복수노조금지라 같다. 그리고 조합원수 확인, 선거 실시 등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업무는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함으로써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 당위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는 산별노조의 사업장 지부(지회, 분회)도 창구단일화 대상에 편입함으로써 산별교섭 자체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동안 기존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면 사측은 복수노조 금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노조를 불인정할 것이다. 산별노조 산하조직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정으로 비정규직 노조가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피할 수 있었다. 기존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노조는 대부분 소수노조이다. 따라서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로 인해 소수노조인 비정규노조는 산별 차원의 교섭을 못하고 교섭권이 박탈된다.

2011년 조건은 산별노조운동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단위사업장 현장에서는 정규-비정규 연대파업, 지역 차원에서는 고용보장에 맞서는 지역총파업을 만드는데 일관되게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역총파업은 지역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들을 내 건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한다. 이런 힘으

로 산별과업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그간의 방향, 슬로건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게중심을 미조직 조직화로 옮기는 것이다. “중소영세사업비정규 노동자 조직하지 않는 조직은 산별노조가 아니다.” 기업별노조 연합체일뿐이다. 이런 명제를 근간으로 산별노조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2. 노동시장, 착취구조의 재편과 민주노조운동

_정규직 중심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는?

1) 현실

노동시장은 크게 정규직-비정규직 이원구조로 재편되었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층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착취의 주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층은 이제 더 이상 한국 노동시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부가 되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호조건은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가능한 상태이다.

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우경화 경향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원체제로 재편된 노동시장 구조를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노동시장을 이원체제로 재편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데 맞서 노동운동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시도해 왔는데, 일시적 부분적 성공 사례는 있었으나 대체로는 실패해 왔다.

지난 십수년간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자본과 정권의 제도개악에 대해 대사업장 정규직을 주요 구성 부분으로 하는 민주노총은 한 번도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개별 자본 차원의 대응에서도 주요 대사업장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투쟁으로 나서지 못했다.

2) 원인진단

지도노선의 문제

이 상황에 대해 그동안 노조운동 지도부의 운동노선에 주목하여 대응했다. 즉 노조 지도부의 투쟁회피를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보고 대응했다. 그동안의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요체도 여기에 있었다. 민주노총이나 산별조직의 우경화된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혁신요구는 물론이고, 단위사업장 노조지도부 또는 관련된 현장조직에 대한 비판과 혁신요구도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다. 물론 노조운동 지도부의 우경화는 엄연한 현실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을 세삼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 노조운동 지도부의 혁신은 민주노조운동이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받아안지 못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즉 우경화된 지도부가 강변하는 조합원 책임론이 한계를 갖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자신의 문제로 나서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현실적 근거가 있으나, 정리해고 공세 하에서 정규직 조합원 대중의 투쟁요구 역시 지도부는 받아안지 못하고 번번히 투쟁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노선, 지도부의 혁신이라는 면에서의 여전히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유의미하다. 지도부 문제는 민주노조운동 구성원의 한계(조합원 우경화)로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대중의 우경화 문제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는 가능한가?

그렇다면 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를 구성 주체로 하는 민주노총이 재편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즉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대중적 요구와 투쟁으로 받아 안을 수 있는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실패의 일차적 책임 소재는 정규직에 있다. 그러나 도덕적 비난은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고, 문제의 해결책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도덕적 비난(‘정규직 기득권론’)은 자본이 책임을 노동에 전가하고 노동계급을 이간질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교활한 술수이다.

이런 것들을 경계한다 하더라도 현상적으로 보면 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비정규직 이원체제를 자신의 노동조건 유지 향상을 위한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한국적 특수상황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빈번히 나타난 경향이기도 하다. 즉 현재 민주노총의 주요 구성 부분인 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우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5년간의 신자유주의 공세의 가장 일차적 공격목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초기에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으로 그 공격을 막아 내기를 원했고, 투쟁에 나섰다(97년 노개투 총파업 등). 그러나 거세게 몰아붙이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 앞에서 노조 지도부가 먼저 무너지면서 투쟁이 실패하자 대중은 차츰 다른 방식의 생존전략을 찾아 나섰다. 먼저 가장 약한 부분이 노조를 떠나 사측에 투항하여 살아남고자 했다. 그 다음이 투쟁을 포기하고 임금과 노동강도에서 후퇴하면서 고용을 보

장받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생존전략을 택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3) 민주노조운동 혁신이나? 새로운 대안의 건설이나?

15년간의 공세로 노동시장 재편이 거의 완료된 조건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만약 민주노총의 주요 구성원인 대사업장 정규직 조합원들의 우경화 정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면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무망한 일일 것이다. 더구나 1500만 노동대중 중에서 불과 70-80만명에 불과하므로 조직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다지 연연해야 할 규모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노동계급의 대표적 대중조직은 새롭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경로가 어떠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 민주노총의 역할이 무엇이나이나.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혁명적’ 방식이나? 민주노총의 변화에 의한 연착륙이나? 이것을 미리 정하고 갈 문제는 아니다. 두 가지 길에서 가장 중요하고 공통적인 것은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주체(가장 가능한 새로운 주체는 비정규 노동자들)가 조직화되고 투쟁으로 나서는 경로를 전망해 봐야 한다. 일상적으로는 현재의 민주노총의 지원연대에 힘입어 투쟁하고 조직을 만들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외형상 매우 완만하고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결정적으로는 대투쟁 방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민주노총과는 다른 제3의 형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그냥 기다리는가? 민주노총운동에서 운동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활동가조직의 운동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체제가 곧바로 급격한 노조운동 지형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운동의 한계가 심화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확대되면 복수노조체제는 노조운동의 지형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이 경우 비정규 노동자들의 폭발적 투쟁이 터지기 전이라도 복수노조체제는 민주노총 울타리를 넘어선 새로운 조직을 형성케할 것이다. 이 경우 과도기적으로 민주노총 울타리라는 외피 하에서 내부적으로는 계층적 기반과 지향을 달리하는 노조들이 다양한 형식의 연합체를 형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활동가들은 이 지형에 대비하고 분명한 입장을 갖고 일치된 행보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2-13년의 직선제는 민주노총 조합원 대중이 치유불가능한 상태로 우경화되었으나, 새로운 주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민주노총의 역사적 운명을 가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후퇴한 운동방향의 재정립

1) 상황

- 기초적 수준의 혁신마저 실패

지난 수년간 민주노조운동 위기와 혁신이 제기되었으나 혁신은 실패했다. 혁신과제로 여러 가지를 제기했으나 실천적으로는 가장 초보적인 문제인 도덕성(부패와 성폭력 척결), 자주성(재정 자립화), 투쟁성(총파업전선 구축), 민주성(직선제) 문제를 중심으로 혁신운동이 전개되었다.

도덕성 문제는 가해 당사자의 처벌 등 ‘사건처리’ 수준을 넘어서서 조직 전반의 성찰과 대안마련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금속노조 사무처장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사안은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문제의 조직적 접근의식은 오히려 퇴조하고 있다.

재정 자립화 문제는 민주노총 지역조직과 중앙조직이 이미 정부보조금 체제에 편입되어 있고, 산별조직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어 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 코프라티즘

노동운동 방향과 관련된 노조운동 내의 격돌이 있었다. 한국노동운동이 코프라티즘 체제로 편입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관련된 노사정위원회 가입 문제는 대의원대회 단상점거로 비화되었다. 현재 외형상으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변칙적 방식으로 노사정 합의 체제에 발을 담그고 있다. 노자 역관계에서 자본 측의 힘이 강해 ‘타협’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을뿐 형식적으로는 노사정 합의체제에 편입되고 있다. 사안별 노사정 체제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주로 자본이 방어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최근 만들어진 근심위는 노동이 방어해야 하는 노사정 체제이다. 향후 노사정 3도 구도의 한 축인 ‘정’이 균형추 역할을 할 기미가 보인다면 민주노조운동은 노사정 체제에 그대로 편입될 것이다.

- 변혁성의 후퇴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노조운동은 이념, 요구에서 심각한 후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조운동이 방어에 급급하다보니 필연적으로 야기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방어기에 전면화되는 체제모순을 포착하고 공격하기 보다는 후퇴와 타협 위주의 노조운동 기조 때문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노동 측의 역공으로 제기된 사회공공성 문제도 최근에서 퇴조하는 경향이다.

- 노동자정치와 민중연대의 후퇴

노동자정치운동은 '진보정당운동'의 틀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변혁적 노동자 정치운동의 지향성을 잃고 체제 내 운동으로 급격히 경도되고 있으며, 그 방식도 노동대중을 투표에서의 지지역할로 한정지우는 방식이다. 진보정당운동의 적자를 자임하는 민노당은 심지어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의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다른 진보정당들 역시 질적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실상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합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민주노동당지지 형식으로 사실상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정치적 연합에 동조하고 있다.

변혁적 노동자정치운동을 지향하는 힘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대중적으로는 물론이고 활동가들과 선진노동자층에 대해서도 변혁적 노동자정당이 대안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불신에 대한 성찰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회변혁은 다수 대중의 동의와 행동에 의해서 현실화되는 것인데, 변혁적 노동자정당 노선이 과연 대수 대중의 동의와 행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

2003년 노동조합, 당, 전선체를 석권하려는 자주파의 전횡에 의해 민중연대전선은 파탄났다. 이후 민주노총의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놓고 지리한 내부투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의 분당, 민주노총 우파 지도부의 투쟁실패 등 이완현상과 한국진보연대 스스로의 한계가 확인되는 가운데 민중연대운동의 재편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본질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외형상의 변화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혁적 노동운동 진영은 한국진보연대 아류에 대한 경각심을 넘어서는 민중연대전략을 합의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중조직의 원리에 입각한 민중연대운동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2) '사회운동노조주의'에 대해

연구소는 발제문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전망부채를 타개할 방향으로 ‘사회운동노조주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대안세계를 만들어 가는 노동자운동으로서의 지향을 분명히 밝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당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노조나, 정치적 의제는 정당에 위임하고 경제투쟁만을 담당하는 노조를 지양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다만 대안세계(이것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일텐데)를 건설, 쟁취하는 문제에서 정치조직(정당)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혁명적 생디칼리즘’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3)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물론 조합원 대중의 교육이 중요하다. 연구소 발제문도 이를 강조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3개년 계획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이든, 투쟁이든 운동의 축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이다. 노조운동의 내리박기식 관료적 지침은 이미 박제화되었다. 현장에 운동의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주체가 되어야 할 현장 활동가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

여전히 치열하게 투쟁하고 운동성을 견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비정규노조의 간부 및 활동가들이 많다. 그러나 좌우 노선을 불문하고 노동조합 간부 및 활동가들의 운동성이 심각하게 약해지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상급조직 상근활동가, 대사업장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에게 이런 경향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좌파 활동가들은 과연 진정으로 사상과 실천에서 활동가다운가? 활동가들의 일상생활이 과연 활동가다운가? 상당수 활동가들이 사상, 실천, 일상에서 운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활동가들이 사상적으로, 실천적으로 일대혁신을 거치지 않고서는 민주노조운동의 변화, 노동계급의 계급의 대중적 주체형성도 그만큼 지체될 것이다.

2부 토론회 토론문

민주노조운동과 지역 연대운동 강화를 위한 고민

서장수(민중행동 상근활동가)

먼저, 주발제문을 가지고 조직 내부적인 토론을 거쳤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아래의 제기들과 주장들은 개인적인 소견임을 밝혀둡니다.

주발제문에 대한 토론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발제문의 표현대로 저성장-위기반복의 국면을 계속할 것이고 이에 따라 총자본의 탄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신자유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했던 민주노조운동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발제문은 현재의 정세와 기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평가 속에서 이념적으로는 '사회운동노조' 전략을, 조직적으로는 총연맹에 대해서는 지역본부를 연대운동의 중심으로 하는 지역운동의 강화와 초기업노조(대기업노조)운동의 혁신을, 마지막으로 투쟁과제로써는 전노동자의 단결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연대임금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최저임금투쟁 확산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동의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밝힙니다.

- 하지만 본 발제문의 제안들은 다소 추상적이거나 지향점만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념적으로 제출된 '사회운동노조'라는 전략의 경우, 단지 사회운동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만으로는 부족하듯이 이념에 걸맞는 조직형태와 운영원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민중행동에서도 '사회운동노조'를 가지고 지역활동가들과 토론을 해보았으나 지향에 대한 동의지점을 구체적인 상과 실천양식으로 연결시켜내지 못하고 그런 방향의 토론이 되지 못해 아쉬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본 발제문을 살펴보면, 주류 민주노조운동이 사회적협약을 중심으로 두고 (독일식)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하는 운동에 주력하면서 노동자 내부의 노동조건과 임금의 격차를 해소를 통한 단결은 실패해왔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는 오히려 민주노조운동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해소하며 단결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세워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류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사회운동노조'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운동노조'라는 것이 단지 '이념적' 지향으로만 남지 않고 구체적이 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이러한 이념에 맞는 구체적인 양식(체계나 작동원리) 혹은 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만약 이런 토론이 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기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현재의 노동조합 체계와 운영원리에 대한 접까지 평가가 되고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의 구체적인 양식을 혁신적으로 개조시키거나 혹은 대체시켜야 할 부분까지 토론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또한 본 발제문은 저성장-경제위기 반복 상황에서의 세 가지 투쟁과제를 제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최저임금투쟁의 확대재편을 통한 연대임금 투쟁이고 두 번째는 대안세계화운동과 친화성을 가지면서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는 방향으로 개악 노조법의 대응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안들은 노동자 내부의 연대와 단결의 확대와 강화에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과제에서 본 발제문은 '지금까지의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대응은 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한계로 '첫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경우 기간제법, 파견

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을 크게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현실 역관계상 쉽지 않고 ‘돌째,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노동시간유연화를 먼저 막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 운동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정규직 비정규직, 대공장 중소하청업체 사이의 임금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혀보는 공동 투쟁이 먼저 필요한 듯 보인다. 소위 연대임금 투쟁이라 부르는 것이다. 고용유연화, 시간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역전시킬 만한 정치적 힘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선은 현실 가능한 공동 임금 투쟁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한 주장은 일면 공동임금 투쟁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철폐, 노동시간 단축으로 나가는 ‘단계’론적 주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 격차를 줄이도록 투쟁하는 것도 만만찮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제기해왔고 어쩌면 사활을 걸어왔던 비정규직 철폐에 있어 임금격차만의 문제로만 제기되는 것은 선뜻 이해되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몇 가지 연대임금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의미 설명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대임금투쟁의 상과 현실가능성 그리고 노동자단결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제출된 국제연대에 대해서는 지역운동의 입장에서도 동의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국제연대가 좀더 현장과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현장조합원이나 혹은 활동가들이 외국사례나 활동을 통해 대안을 찾으려는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기구와 노조상급단체들 간이나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지역에서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타임오프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평가와 대응방안에 대해 현장과 지역에서 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기간에 노조와 조합원이 괴리되었던 현장상황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타임오프제로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러한 쟁점이 노조에 대한 총체적 탄압으로서가 아니라 ‘노조전임자 임금’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복수노조의 경우에는 타임오프제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타임오프제 대응처럼 지금도 복수노조에 대한 대응의 준비는 부족할 뿐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쟁점도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부터라도 내부쟁점을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세워나가는

것에 적극적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연대운동의 강화를 위한 고민과 제언

- 민중행동은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자)운동을 넘어서 노동(자)운동이 포괄하거나 연대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제부문운동과 연대를 창출하고 지역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활동가들의 결집하여 2003년에 결성되어 2007년에 본조직으로 출범된 조직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위해, 우선 지역에서 비교적 대중운동으로 형성되지 못한 부문들에 대해 연대적 활동을 시작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에서 민주노총과 단체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연대회의 및 비정규공대위 그리고 반빈곤네트워크(준) 등 연대운동체를 만들어내었고, 장애운동과 인권, 여성, 사회공공성, 페미니즘, 교육문제 등에 대해 연대를 확장하는 활동을 한축으로, 다른 한축으로는 쏠사회적인 이슈와 쟁점들에 대한 지역연대활동 및 대책위 등의 활동을 통해 정세에 대응해왔습니다 .

물론 이러한 지향은 노동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의 중심이동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연대를 확장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의제와 부문운동들이 사회적으로 대중운동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심이 되어야 할 노동운동은 약화되거나 후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세도 정세지만 부문운동이든 연대운동이든 모두 정체되기도 하고 힘든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 지역의 연대운동들은 대체로 민주노총지역본부를 포함한 지역의 각종 연대운동들이 계급적 지역전선 형성을 위한 전선체운동(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등), 장기적 의제와 과제를 가진 연대체운동(비정규공대위, 이주연대회의, 반빈곤네트워크, 사회공공성강화연대 등) 각종 현안과 쟁점의 해결과 대응을 위한 대책위(동산의료원 식당노동자 직고용 보장 대책위 등)운동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연대체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여기에서는 각종 지역연대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볼때 현장(조합원과 조합간부, 사회단체활동가 등)에서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 현장 조합원들의 경우

노조 회의자료에만 지역투쟁 현황이 있을 뿐 현장까지 홍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각종 투쟁소식들을 접하고 있다. 업종별로 소식과 전국적인 시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려지나 다른 업종의 소식은 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지역본부나 지역지부의 활동도 현장의 조합원들은 잘 모른다.

- 지역연대의 경우

투쟁동력이 형성되지 않는다. 동력이 있는 곳은 민주노총지역본부 밖에 없다. 민주노총지역본부에서 조직되지 않으면 각종 연대체의 조직동력은 굉장히 저조하다. 지역본부외에 다른 산별업종의 경우 지역 사회단체와 사회운동과 교류가 거의 없다.

- 지역교육이나 토론회의 경우

총연맹과 산별 지침에 의한 간담회는 끝간 체계내에서 가동시키면 조직이 되지만, 각종 지역교육이나 토론회의 경우 현장 조합원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단체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 기타

‘전국적 총파업’, 혹은 ‘지역적 총력투쟁’ ‘위력적 시위’ 등에 대한 기대치와 신뢰감이 없다 등등

○ 사회운동의 역할을 강화하는 민주노조운동을 위한 제언

-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운동적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 ① 민주노조운동은 이념적 혁신을 넘어 현장이 사회운동과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② 민주노조운동은 노조 내부 현안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투쟁을 알리는 선전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 ③ 민주노조운동은 대표자회의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위상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 연대운동 강화를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① 연대운동의 연대를 확장하자.

대구지역의 각종 연대체들의 상황을 볼때, 투쟁의 확장과 동력 등의 문제 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듯하다. 수년의 걸친 연대체의 활동이 동력면에서 유지하는 수준이나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공세에 대응하기에는 힘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나의 의제로 뭉쳐진 연대단위들만의 힘으로는 투쟁을 밀고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연대운동들이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토론하면서 투쟁을 모어나가는 활동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② 지역운동을 총화하는 방안을 고민하자.

노동운동뿐 아니라 여성운동, 이주노동자운동, 빈민운동, 사회복지운동 등이 모두 모여서 소통하고 횡단하는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인 플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각 운동이 원심화되고 개별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의미에서, 그리고 지역전선을 강화시켜낸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지역운동의 전국화, 국제화를 고민하자.

지역운동이 지역 속에만 있거나 혹은 한 개 지역이 모범적으로 투쟁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는 오래갈 수 없다. 따라서 전국적인 연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전국적인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연대나 교류도 마찬가지다.

결론을 대신해서

현재, 지역에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활동가들에게는 모든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로 지일 테지만 하루하루가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돌파구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을 향해 뛰어보겠다는 결의의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처지의 활동가들의 결의와 의지를 모을 지점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보지만 아직 뚜렷한 해답이나 전망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과연 현실에서 그러한 지점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지역에서 나름대로 장기적 전망의 이념과 전략의 수립을 위해

학습을 하고 토론을 하며, 각종 연대와 투쟁에서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너무 많은 할 일속에서 지속성을 가지기도 화두에 집중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고 암중한 정세 속에서 민중행동은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큼니다. 다시한번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출범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소개의 글처럼 “노동자운동에 만연해 있는 무기력과 자조를 뒤로 하고 노동자운동의 부활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토 론 문

임승철(혁신네트워크 집행위원장)

1.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에 대한 진단

- 현재 한국 노동운동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이상으로 '총체적 위기(general crisis)'를 맞고 있다.
- 민주노총 수립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와 노노 분할 지배전략을 넘어서는 노동운동의 주체적 전망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점, 설사 대안적 노선 제시와 실천적 지도력이 부족하다 해도 운동의 근간이 되는 '대중성'의 붕괴(대중에 복무하는 헌신성의 약화, 극심한 정파적 분열, 관료주의, 도덕적 해이 등)가 치명적이다.
- 노동운동과 대중과의 괴리(소통 및 공감 부재)를 틈탄 자본과 정권의 노동악법 및 노동기본권 말살 공세를 통한 산별노조 무력화와 민주노총의 아래로부터의 해체 시도는, 주체적인 비상한 돌파구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2011년 7월 복수노조 전면 허용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존폐가 좌우되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제3노총의 등장과 민주노총의 소수화와 빅뱅)
- 활동가(조직)들과 지도간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신적 실천적 성찰과 혁신을 하지 못하면, 구태의연한 노동운동에 실망하여 점차 현실에 타협하고 실리주의적 의식으로 경도되어가는 중장년층 조합원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비정규직 및 진취적인 청년노동자들과의 결합에도 실패하여, 더 이상 민주노총이 세상을 바꾸는 대중적 노동운동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그로 인한 비즈니스 노조주의와 그 역편향으로서의 정파적 노조 분열의 발호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2. 노동운동의 메타적 시각과 현실적 처방의 결합의 필요성

-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수세적이고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단기실리주의나 뺑파업을 넘어서는 메타적 대안 담론과 현실적 전략전술이 필요하다.

1) 새로운 패러다임 (paradigm) - 진보진영의 경제담론과 노동담론

①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호혜(우애)적인 사회협동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 고용 없는 성장이나 노동의 유연화 중심의 경쟁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그대로 놓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늘리는 처방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경제구조의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완전고용의 추구 속에서 생존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 사회협동경제는 국가기간산업 및 주요 재벌대기업의 공기업화,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기업화와 우량화, 공기업(대기업)과 중소 협동조합기업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내수와 수출의 균형, 농업-공업-서비스업-자영업의 유기적 협동을 추구하는 경제이며, 시장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통제하고 시장의 최소화(기본 생필품의 탈상품화 지향 / 식의 주는 기본적으로 무상지원,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를 지향하는 경제체제이다.
- 또한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협동경제와, 상호 호혜적이고 대칭적인 경제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 블록 및 대칭적인 진보벨트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국제적 협동경제를 지향한다.

② 노동존중의 사회협동경제

- 사회협동경제는 지식기반 경제에 기초한 고기술(원천기술)-고부가가치와 고숙련(다기능 지식노동자화) 및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산업노동정책을 지향한다.
- 자동화에 따르는 생산성의 향상과 자연 인력 감축을 노동시간단축과 여가의 확대로 향유하며, 사회고용책임제(산업횡단적 재취업훈련 및 전환배치 포함)를 통하여 실업과 비정규직이 극소화된 완전고용체제를 지향한다.(실업의 유급노동화 전략과 자발적 실업 해소, 자발적 비정규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규직화, 신축적인 노동유연화와 산업횡단적 고용보장 체제 구축)
- 노동기본권은 완전히 보장하고 산별교섭의 제도화와 경영참여의 제도화를 통하여 노사 상생의 협동경제를 실현한다.(삼성, 현대 재벌 등 악덕 기업주 엄단을 통한 일벌 백계와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과 윤리경영 정착이 전제-착한기업화)
-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혁신화와 우량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기업)과 함께 협동경제의 핏줄이 되도록, 노동조합이 생산과 경영의 주인으로서 적극 참여한다.

- 노동조합의 가입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노동조합이 지역 소비조합 혹은 생활협동조합 등과 긴밀한 협력 하에 민중에게 봉사하는 정치사회적 노조활동을 전면화 한다.(노동자 정체세력화 및 노동자 정치 헤게모니의 토대)

〈천민적 기업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존중 기업 경영으로〉

| 국민에게 고통주는 기업 | ⇒ |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
|---------------|---|------------------|
| 비정규직 착취 | | 비정규직 오남용 및 차별 철폐 |
| 중소기업 갈취 | | 중소기업 적정납품단가 보장 |
| 고용 없는 성장 | | 고용의 확대를 통한 성장 |
| 소비자 가격 담합과 인상 | | 적정가격과 투명한 기업경영 |
| 노사관계의 파행 | | 대등한 노사관계와 공존전략 |
| 무차별적 이윤독식 기업 | |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 |

2)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제2민주노조운동과 제2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이 필요하다.

- 제2민주노조운동은 아래로부터의 민주노조 복원 운동과 한국적 산별노조운동에 기반하여 민주노총의 정치사회적 실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치사회적 조합주의 운동노선이다. 이는 노동자가 경제와 정치의 주체로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산업노동정책투쟁’을 통하여 기업과 산업 나아가 국가를 개조하고 경영해 나갈 대안적 방향과 전망을 대중적으로 제시하면서 당면한 실리의 쟁취를 결합해 나가는 투쟁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 진보적 정치진영과 함께 ‘정치투쟁과 선거투쟁을 전략적으로 전개’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전망과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준정당적 위상으로 발전해야 한다.
- 무엇보다 기존의 낡은 조직질서를 극복하고 현장에서부터 대중적 신임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현장조직운동의 주체를 조직하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긍정적 모범의 감화로 새로운 노동운동의 불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 발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확보 단협 전략’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 민주노총이 전개하는 전태일 평전 읽기 운동도 일회성 이벤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노동조합이 실리주의로 경도되지 않도록 현장조직운동부터 새롭게 거듭나면서 노동조합이 정치사회적 조합주의를 체질화와 제도화 하도록 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기

업 단위에서부터 정치사회국을 신설하고 상근역량을 대폭 할당하여 교육위원회, 교육 선전국 등과 함께 산별의식과 정치의식을 강화하는 참신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당조직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이 함께 할 수 있는 현장정치 활동 및 지역연대(정치)활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여 낮은 관심과 분위기를 쇄신하여 대중의 참여를 차츰 유도해 나가야 한다.

<참고 자료 1>

■ 제2 노동운동의 3대 가치

| 제2민주노조운동 | 제2노동자정치세력화 | 제2진보대통합당 재창당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사회적 노조운동 전개로 현장조직 난립 및 실리주의(Business Unionism) 극복 ■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와 함께하는 한국적 산별노조 ■ 조합원과 민중에게 지지받는 새로운 민주노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파중심 상층위주의 위탁정치 청산 ■ 노동대중 주도의 평당원 직접참여정치 ■ 노동정치와 주민생활정치 결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주도로 진보정당 분열 극복과 대혁신을 통한 진보대통합당 재창당 ■ 과학적 진보정책 생산 ■ 혁신적 참여정치와 의회전술의 모범 창출 |

■ 노동자정치세력화 시기 구분

| | | |
|---------------|---------------------------|-----------------------------|
| 제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 97년 국민승리21~민주노동당 분열, 분당 | 비주체적이고 형식적이며 분열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
| 제2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 현재~노동자 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 및 강화 | 주체적이고 내실 있으며 통일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

■ 제1기 노동운동과 제2기 노동운동 비교

| 구분 | 제1기 노동운동 | 제2기 노동운동 |
|-----------|------------------------|------------------------------|
| 사회성격 | 개발독재 체제 (국가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체제 (시장자본주의) |
| 정권의 노동정책 | 저임금, 무노조 체제 | 노동 양극화 민주노조 무력화 전면 공세 |
| 노조운동 이념 | 경제적 조합주의 (임금과 기업복지 중심) | 정치사회적 조합주의 (고용과 사회복지 중심) |
| 산별노조 노선 | 종유럽식 산별노조 | 한국적(우리식) 산별노조 |
| 노동자 정치세력화 | 상층 위주, 정파 중심의 위탁정치 |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대중 직접 참여 정치 |
| 조직사상 | 진보정당 다당제 복수노조 전면도입 | 진보대통합당 재창당 1국1노총1산별 1사1노조 |

3. 발제문에 대한 몇 가지 멘트(참고자료2,3 참조 바람)

① 발제문은 현재 산별노조의 위기와 관련하여 이상적 '교섭체제와 조직모델 중심'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를 최대한 이용한 '현실적 투쟁 중심'으로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 조직형식주의와 비현실적인 중앙교섭 우선주의의 과오로부터는 벗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 회귀적 후퇴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실적인 투쟁'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금속노조와 공공연맹(운수 노조, 공공서비스노조) 등 산별노조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독일식 산별노조를 기계적으로 모방한 형식적 대산별-지역산별 노선의 집착을 버리고, 한국식 산별노조로의 이행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요구를 실사구시 하여 산별노조의 붕괴를 막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현실적 투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발제문은 민주노총 임금 요구안(2010년 기준으로 월 33만9천원 인상)과 동일한 액수로 최저임금인상액을 요구하고 함께 투쟁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이다. 평균 통상임금의 50%를 중단기적 장기적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평균 통상임금의 60%(EU권고안)를 지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 금속노조 최저임금 4200원

◆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5.1% 인상) / 8시간 기준 일(日)급제 34,560원 /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하의 월급제 경우 각 902,880원과 976,320원

◆ 2011년 금속노조 최저임금 요구안

: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 50%(시급 5,152원, 월 1,076,770원)

~ 현재 사용자측 제시안 : 시급 4370원, 월 1005000원

③ 발제문은 산별노조 차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하청업체 사이의 임금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혀보는 공동임금투쟁을 먼저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또한 약간 생뚱맞은 얘기이다. 그동안 산별노조 차원의 임금인상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기업별 업종별로 임금 편차가 크고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인 조건(한계 기업의 퇴출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실질적인 연대임금정책이 실현될 수가 없었다. 또한 산별

노조 차원의 공동임금 요구안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단사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조> 2011년 금속노조 임금인상 요구

: 기본급 130,730 정액 인상

: 현대차 임금인상액 기본급 7만9000원(별도 : 성과급 300%, 일시금 500만원, 주식 30주 지급)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는 실효적인 투쟁은 업종별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투쟁이다. 그리고 현재 금속노조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핫이슈는 주간연속2교대제-월급제이다. 2010년 하반기~2011년 임투 시기에 이 의제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해법을 못 찾으면 역산별(탈퇴)의 흐름이 견잡을 수 없이 가속화 될 것이다. 현재의 조건에서 자동차 완성사 정규직들을 산별노조 의식으로 견인하기 위한 유인책은 금속중앙과 자동차업종분과가 주간연속2교대제-월급제 쟁취 공동투쟁을 적극 조직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참고자료2 참조 바람)

④ 발제문은 전국적 투쟁 전선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공공노조, 운수노조)을 포함한 주요 산별노조 간에 공동기획과 공동투쟁의 원칙과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하고 있다. 이는 매우 타당하다. 다만 그 의제가 각 산별노조들의 산업노동정책투쟁의 사례와 과제에 대한 교류와 공동으로 대처할 산업노동정책투쟁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예) 불법파견 대응 투쟁, 산별노조 법제화 투쟁 등)

⑤ 발제문은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를 통한 지역연대투쟁 강화를 현 단계의 주요한 과제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지금 당장 지역지부의 강화가 가능하며 그를 통하여 산별노조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가? 공공서비스 서경지부는 사실상 산별노조가 아니라 비정규직 중심의 일반노조이며, 최근 비정규직의 조직 확대를 놓고 산별노조 지역지부가 당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연대투쟁 모범도 전체적인 산별지역지부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 사례에 불과하다.(경주 지부 20개 지회 중 인지콘트롤스 등 19개 지회는 현대차 협력업체 노조임)

현재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의 산별노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대기업지부의 해소와 지역지부로 편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특히 2011년 기업별 복수노조 전면 도입을 앞두고 기업별 노조의 임단협을 강화하려는 조합원들의 심리가 강한 조건에서, 현대

차 기아차 등의 대기업 지회들이 이제껏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연대투쟁에 나서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유사한 '자동차 대기업 단위들의 공동임단투'를 중심으로 사내 하청 및 사외 협력업체 노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업종별 임단투'를 서서히 강화하면서 대기업 조합원들의 연대의식을 점차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산별 지역지부와 지역본부의 강화도 일단 산별노조가 정착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탈산별의 흐름을 저지하고 대기업 정규직들이 다시 산별노조에 대해서 다시 해보자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연착륙 비상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⑥ **발제문은 지역본부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적으로 타당한 말이다. 다만 그 역할이 산별노조 지역지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연대투쟁을 넘어서서 개별적 산별지역지부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공단 및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연대단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공단노조 및 공단협약 나아가 지역사회협약지역 추동, 지역활동의 거점인 '민중의집' 건립 등)

⑦ **발제문은 “올해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와 내년부터 시행될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문제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대응 여부에 따라 큰 위기가 혹은 ‘재도약을 위한 결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보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기업별 복수노조의 전면화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사측 노조의 발호와 제3노총의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를 아래로부터 해체시키려는 사측노조 기도를 분쇄하고(유일단체교섭 지위 유지), 제3노총 흐름에 민주노총 대중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재도약을 위해 어떠한 결의를 할 것인가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복수노조 경쟁론은 주관적 모험주의이며, 민주노총이 정파적으로 분열될 소지가 있다. 민주노총 단위노조의 1사 1노조 원칙을 사수하면서, 한국노총을 경쟁보다는 반MB연대전선으로 견인하는 획기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제2민주노조운동과 한국적 산별노조운동의 전개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미조직 대중과의 소통 및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노조의 분열과 해체를 막고 대중적인 노조운동의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공격적 방어 전략의 관건이 될 것이다.

⑧ **발제문에 기아차 노조 등 대기업에서 타임오프 투쟁을 ‘밀실 협상을 통해 실리를 주고받는 거래를 했다’고 평가하는 대목이 있다.** 이는 현실의 주객관적 조건을 감안하

지 않은 일면적 평가이다. 기아차가 그나마 편법으로라도 기존 상근자를 유지한 것은, 지난 시기 소위 민주파(집행상근자)들의 과오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소와 비난으로 인하여 전면 파업이 어려웠고, 사실상 타임오프 공동투쟁전선이 불가능했던 주체 조건에서, 불법 파견 판정 등 현대차그룹의 복잡한 내부 문제의 덕을 본 면이 강하다. 대대에서 조합비 인상을 결의한 것은 조합원들이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써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그나마 선방한 것이다. 다만 이번이 조합원이 민주진영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멸사봉공하는 상근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아차 대대 결정을 반대하여 그나마 따냈던 성과마저 무위로 돌리려는 어용세력의 가공할 준동을 박멸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⑨ 발제문은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집권 세력 교체(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의 강화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물론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도 절박한 노동탄압과 민주노조의 총체적 위기를 방어하고 제2의 노동운동의 부흥기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정권을 아웃시키는 것이 매우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노동운동진영이 숨을 돌리고 재반격과 도약의 시간을 벌어야 하며, 지금은 2012년 정권교체기를 맞이하여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진영이 힘을 모아 반MB반신자유주의 공동전선으로 각계각층을 모아야 한다. 그 힘으로 진보진영의 독자적인 정치적 성과를 가시화 하고 민주당과 국참당을 압박하여 진보진영의 반신자유주의와 6.15공동선언 이행의 요구를 일정부분이라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살아있는 현실의 정치이며 진정으로 노동자와 민중을 위하는 지혜로운 전략이다.

4. 마무리 하며

MB정권의 노동운동탄압을 저지하고 내년의 전열을 재정비하려면 11/7 노동자대회 총궐기의 성공으로 새로운 재기의 가능성을 공감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수면 위로 떠오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진영이 전면적인 캠페인과 정치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용 양극화 문제와 비정규직 의제에 대해 민주노총이 항상 그 무엇보다도 전략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에도 맞고 민주노총의 재활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2〉

■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 : 160만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삶의 변화를 선도하는 산업노동정책투쟁

현대차와 기아차가 공동투쟁을 통하여 주간연속2교대제-월급제를 쟁취한다면, 이는 완성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확대만이 아니라 총취업자의 10%가 넘는 자동차산업 160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그간 소모적인 중앙교섭과 대기업지부를 둘러싼 조직형식 논쟁으로 위기에 처한 금속노조를 실질적인 산별노조로 혁신·재건하는 산업노동정책투쟁의 거대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투쟁 사례

| | | 원-하청 정책(요구) |
|-------|-----|---|
| 당면 과제 | 1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납품단가 인하 금지 ◆노사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기구 운영 |
| | 2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청단가 원가(물가)연동제 적용과 하청단가 인상 ◆매년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5%를 정규직화 |
| 일반 과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청노동자 '고정임률제'와 '임금직불제'도입(중간착취규제법 제정) ◆원-하청 이윤공유제 ◆3~4차 다단계하도급의 폐지와 수평적 조달체계 구축 |

고정임률제 : 하청 재하청에 상관없이 동일노동을 하는 모든 하청노동자들에게 원청 임금의 특정 비율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식(예) 90%이상

임금직불제 :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 산업노동정책 요구의 업종별 분화 사례

| | 국내 산업발전 정책 | 고용정책 |
|-------|----------------------|---|
| 민주노총 | 산업공동화 극복과 내수산업 균형 발전 | •완전고용 보장(비정규직 오남용 근절) •주35시간제 법제화 |
| 금속노조 | 제조업 육성법 제정 |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총노동시간 상한제 |
| 자동차업종 | 해외공장비율제 | •주간연속2교대제로 신규인력 확충 •매년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5%를 정규직화 |
| 조선업종 | 해외공장 신설 사전 합의제 | •4조2교대제 3조3교대제 등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 변경을 통한 잡 쉐어링(총고용 보장) •사내하청 비율을 전국 평균 이내로 축소 |

〈참고 자료 3〉

1. 독일 대산별노조의 교섭에 대한 왜곡 교정

■ 대산별 중앙교섭은 업종(소산별)교섭과 배치된다?

금속노조에서 최근 3년간 중앙교섭과 지역교섭을 강행하면서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업종별 단체교섭은 산별노조 교섭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던 어의없는 선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산별교섭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악의적 왜곡이다. 독일노조도 산업별 지역교섭이 주축을 이루지만 업종별 직종별 교섭이 보장되고 있다.

〈독일 금속노조 단체협약의 종류〉

- 지역별협약 - 연방전체, 일정지역 또는 개별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
- 업종별협약 - 금속산업, 철강산업, 특정부문 또는 금속거래업을 대상으로 한다.
- 직종별협약 - 생산직근로자, 사무직근로자 또는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한다.

■ 산업별 단체협약은 기업별 단체협약과 모순된다?

원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은 중앙지역교섭을 한 후에 단체협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별로 보충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다.(이것은 기업별 보충교섭을 단체협약이라고 하지 않음) 그러나 독일 폭스바겐 경우에는 별도의 기업별 협약을 체결 한다(금속노조 지구단위와 폭스바겐 사용자 간에 단체교섭 체결). 이는 미국의 '패턴 교섭'과

유사한 방식인데 패턴 교섭이란 전국조합(산별 조합중앙본부)이 해당 산업 중 최대 영향력을 지닌 대기업 하나를 선정해 단체교섭을 행하는 것이다.

2. 한국적(연방제적) 산별교섭의 필요성

① 다양한 업종분과별 교섭창구의 필요성

형식적인 중앙교섭을 대신하여 조선업종과 자동차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단위에서도 업종분과별로 임단협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원강업 등의 철강 기업들도 철강업종 교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타 조합원들은 금속일반업종협의회로 묶어서 연합교섭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 부분은 거의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업별 교섭과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단교섭이 절실하다. 더욱이 그동안 진행돼왔던 중앙교섭과 금속일반업종 교섭의 실체가 별반 차이가 없으며, 이미 중앙교섭의 실패와 더불어 사문화된 지역지부 임단협보다는 17,6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조합원들의 단합된 힘에 기초한 금속일반업종 교섭이 더 효과적이다.

〈 업종별 현황(2007.10 현재)〉 * 개별조합원(133명)을 기타로 포함

| 업종 | 완성차 | 자동차부품 | 기계금속 | 전기전자 | 조선 | 철강 | 기타 | 개별조합원 | 합계 |
|----------|--------|--------|--------|--------|--------|--------|-------|-------|---------|
| 조합원수 | 93,648 | 22,331 | 12,684 | 4,691 | 5,408 | 5,797 | 223 | 337 | 145,119 |
| 사업장 | 14 | 93 | 45 | 34 | 7 | 22 | 8 | | 223 |
| 전체조합원수대비 | 64.53% | 15.38% | 8.74% | 3.23% | 3.72% | 3.99% | 0.15% | 0.23% | 100.0% |
| 전체사업장수대비 | 6.28% | 41.7% | 20.18% | 15.25% | 3.14% | 9.86% | 3.59% | | 100.0% |
| 누적퍼센트 | 6.28% | 47.98% | 68.16% | 83.41% | 86.55% | 96.41% | 100% | | 100.0% |

■ 자동차업종 교섭 창구의 필요성

- 지난 3년 간 완성차 자본의 사보타지로 중앙교섭이 실패하였고 당분간 산별교섭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중앙교섭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산별교섭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것은 산별(중앙) 최소 요구를 업종별 임단협 요구와 결합한 업종별 대각선 교섭 혹은 자동차업종 패턴교섭이다.
- 자동차업종의 교섭이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 부문이 금속노조의 주력부대이나 지난 중앙교섭의 실패와 향후 산별교섭의 난망함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산별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완성사 정규직 조합원들을 산별 의식과 실천으로 채무장시킬 단계적 방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15만을 모두 책임지는 중앙 임단협 체결이 불가

능한 현실적 조건에서는 자동차 업종을 필두로 업종별 임단투를 진행하는 것이 대기업 노사 양측의 참여도 가능하고, 단계적으로 중앙협약 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 우선 2008년 중앙교섭을 거부했던 완성사 사용자측은 자동차공업협회와의 업종별 임금교섭을 주장한 바 있다. 완성사 사용자측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업지부의 교섭의 제와 업종단위의 교섭의제가 대동소이하므로 굳이 산별교섭에 참여한다면 비효율적인 ‘중앙교섭-지역교섭-기업교섭’ 구조보다는 ‘업종교섭-기업별 보충교섭’의 구조를 선호하는 것이다. 물론 자동차업종 교섭도 사용자측이 사보타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차가 동일계열의 기업이므로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공동교섭을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측을 끌어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쌍용차와 대우차 사용자를 업종교섭에 끌어들이기는 손 쉬어질 것이다.
- 자동차업종의 임단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대기업 노조의 기업별 의식을 극복하고 금속노조가 장차 계급적 산별노조로 나가기 위해서는 당장은 업종별로 부품협력업체사내하청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앙과 기업지부 차원의 교섭 내용을 보면 매년 강조점은 달랐어도 원하청 불공정거래나 비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 문제를 의제화 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단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벽찬 반면(그래서 항상 형식적인 끼워 넣기 교섭 수준에 머물렀다), 금속 중앙 차원에서 풀기에는 완성사 사용자측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설사 완성사의 사용자가 나오더라도 현재의 완성차 정규직 조합원들의 결의 수준을 모든 사업장의 원하청 불공정거래나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및 고용 문제를 책임지는 데 까지 끌어올리기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은 업종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업종별 경영 상태나 구조조정 수준과 방식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종별 특수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도가 필요하다. 금속노조 내 노동자간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실질적인 임금교섭을 총괄하기가 불가능하다.(지역은 더욱 더 불가능함) 2006년 조합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내 임금 격차는 기업규모별로 네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구성비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자동차의 경우 전체 총액의 35.1%, 비자동차 39.9% 수준이다. 나머지 65~60%는 각종 수당과 초과근로, 특별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먼저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지만 금속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개선하고 조합원 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임금격차 축소도 용이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급속 중양은 민주노총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교섭과 투쟁에 주력해야 하며,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실질적인 임금협상은 임금 체계와 근로조건이 유사한 업종별로 전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중양 최소 권고안→업종별 임금협약 체결→기업별 보충교섭으로 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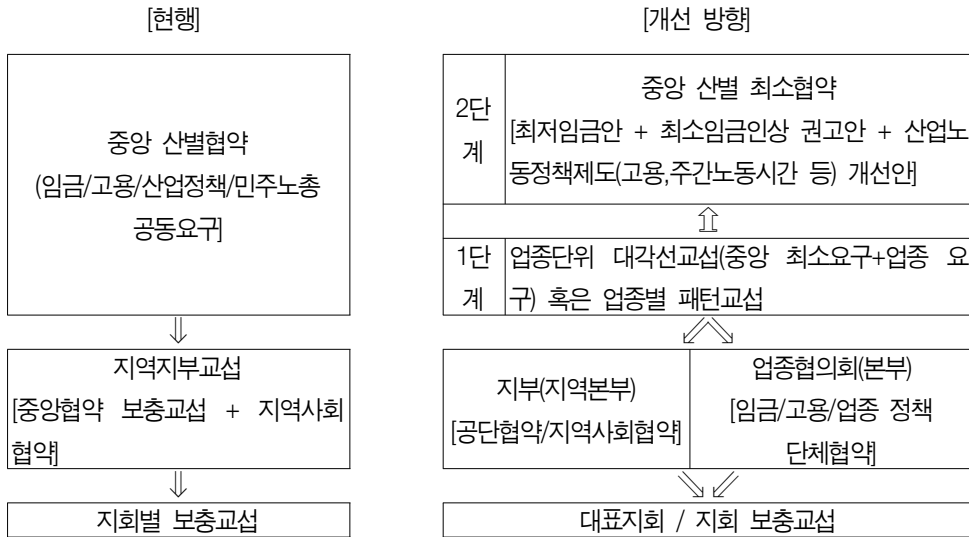
- 2009년 조선업종분과의 공동임단투와 2010년 조선분과 공투본을 거울삼고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자동차분과도 자동차분과 공투본을 결성하거나 자동차업종협의회나 자동차업종본부로 재편하여 2011년부터는 업종별 임단협을 전개해야 한다. 2009년 조선업종분과의 공동임투는 참관노조였기 때문에, 업종별 교섭을 불운시(?) 했던 급속노조의 중앙교섭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조선업종분과의 공동임투는 중앙요구안을 반영하여 조선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요구안을 내걸고 전개되었고,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연방제적 업종별 단체교섭의 돌파구를 통하여 급속노조의 중앙교섭으로 향하는 단계적 로드맵의 상을 제시한 것이었다. 올해 자동차업종의 단체협약 체결투쟁이 전개된다면 현재 화급한 조선분과 공투본의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상호시너지 효과를 수반하는 방향에서 그 구체적 방법과 수단(교섭창구 형태, 교섭 시기, 투쟁 전술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② 한국적 산별노조 이행의 상

| | 한국의 현실 | 산별노조 이행전략 | 투쟁 의제 및 사업방법 |
|-------------------------------|---|--|---|
| 산별교섭의 정치 조건과 노사관계 문화 |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독재 -노사 파트너쉽 부재 / 산별교섭 사보타지 | - 정치사회적조합주의에 입각한 중앙 차원의 정치 사회적 투쟁 우선 전략 - 산별노조 인정과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보편적 요구 투쟁 전개 -제2노동자정치세력화 전략 | -민주노총 산별노조 죽이기 노동 약법 저지(노동기본권 요구) 투쟁 - 사용자의 산별교섭 거부권 금지 법제화 요구 투쟁 - 정치위 획기적 강화와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대중적 참여 -산별교섭 정착한 후 단체협약효력확장 투쟁 전개 |
| 정부의 산업노동정책 단위 및 사용자 단체의 구성 상태 | -정부의 업종별 구조 조정 및 산업노동정책 구사 -자동차공업협회 조선공업협회 등 업종별 | -업종별 교섭창구 신설 -자동차업종 교섭실현을 통한 산별교섭 돌파구 마련 | -대기업의 사보타지로 중앙교섭이 어려우면 중앙의 최소공통요구안(2~3개)을 각 업종교섭에 반영하여 중앙교섭의 간접적 통일성 확보(자동차업종 패턴교섭 가능) |

| | 한국의 현실 | 산별노조 이행전략 | 투쟁 의제 및 사업방법 |
|--------------------------------|--|--|---|
| | 사용자단체 구성 | | -업종교섭은 중앙요구안+업종요구안으로 구성되며 본조가 관장 |
| 산업 및 지역 내 노동시장 구조 및 근로조건 격차 수준 |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초과착취 구조(노동시장 양극화/불공정거래/수직다단계하청) -임금 및 사내복지 격차 OECD 최고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 취약 |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임금 비중 확대투쟁 전개 -너무 큰 임금격차, 중소기업의 열악함과 국가 고용책임제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연대임금정책은 어려움 -원-하청 다단계 초과착취 및 비정규직 차별의 구조를 개선하는 투쟁전략이 필요함 | -업종별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공동요구안 마련->공동교섭투쟁 -현대기아 주간연속2교대-월급제 공투->고진로형 자동차협약의 발판 마련 -각 산별 지역지부는 민주노총 지역 본부로 집중하여 개별 중소기업을 뛰어넘는 지역노동복지 개선을 위한 공단협약 및 지역사회협약 요구 |
| 노조의 역사적 전통 및 대중의식 수준 | 기업별 의식 강함 업종별연대 지향(지역연대의식 약함) 정규직의 비정규직에 대한 양면성 | -기업별 단협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산별로 이행하는 전략 -지역과 업종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 -비정규직의 독자성과 정규직과의 연대를 실현하는 전략 | -대기업 지부 2년 유예 이후에 대표지회(직선제) 및 판매정비부문위원회 설치 필요(대표지회가 기업별 보충협약 체결) -지역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강제(대기업지회의 지역지부 참여 의무화 등) 및 업종분과위를 일상적 연대체인 업종협의회(본부)로 격상 -‘비정규직 지회’를 유지하되 1기업1노조원칙에 따라 기업지부 산하로 배치 |
| 노조의 규모 | 전체 145,119 자동차115,980 완성사93,648 (현대기아8만) 부품 22,331 | -자동차 주도의 연방제적 대산별 전략 -부품사 및 미조직대중 조직확대 전략 | - 자동차미래협약 체결투쟁으로 각 업종별 투쟁을 촉진하고 금속노조 단체협약의 발판 마련 -업종협의회와 공단지회를 통한 미조직대중 가입 확대 |

③ 현 단계 주객관적 조건을 반영한 금속노조의 연방제적 산별 교섭·투쟁 모델



〈연방제(분권형)적 산별교섭 내용〉

| 협약 주체 구분 | 주요 요구 사항 |
|------------------------|---|
| 민주노총 노사정 / 노정 교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사회적인 대정부 요구와 중장기 과제는 과감하게 민주노총으로 이관하고 산별노조는 해당 산업정책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배치 - 노동법 개정, 사회보험보장제(최저임금제, 4대 보험 등) 개선, 근로소득세 감세, 법정노동시간단축, 총고용보장 및 고용확대 방안,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전 산업 차원의 대정부 대국회 투쟁은 결의된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투쟁 시기와 수위를 책임지고 수행 - 노동배제적 저진로(low road) 산업구조를 노동존중형 고진로(high road)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요구하는 산업노동정책대안 제시와 그것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투쟁(산별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효력확장 관련 법제화 등) 및 다양한 정치사회적 개입 활동의 전개 - 노사정위에서 노사정 사회협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임의적 다자협의체 (복수노조 전임자 건 교섭 방식), 노정 교섭 등 다양한 교섭창구 활용 |
| 산별중앙 최소협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만 조합원과 금속 노동자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핵심 의제 2~3개를 선정하고 노사 혹은 노사정 최소협약 체결(포괄적 고용안정 협약, 주35시간노동제 협약, 금속제조업 공동화 방지 및 육성 협약, 비정규직 문제 및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에 관한 포괄적 협약 등) - 임금은 당분간 최소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 대한 상박 이후 원칙 수준의 권고안으로 머물러야 함. * 중앙통일교섭이 자본과 정권의 사보타지로 당장 어려울 경우 간접적인 업 |

| | | |
|-------------------------------|--|---------------|
| | 중단위 대각선 교섭으로 중앙의 요구를 실현한다. | |
| | 1단계 업종단위 대각선교섭 혹은 패턴교섭 | 2단계 중앙통일교섭 |
| 업종협의회 단체협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임금고용협약 + 업종별 산업노동정책제도 개선 협약 * 본조가 업종별 단체협약 지도 및 체결권 행사 〈예〉 자동차업종 단체협약(요구안) - 임금인상안, 하청단가인상안 - 노동시간 단축 및 근무제 및 작업방식 변경 / 자동차 사내하청 부품사 비정규직들의 고용보장 및 국내 신규시설 및 채용(투자) 확대 / 공장 해외이전 및 해외신설 규제 - 원하청 불공정거래 시정, 완성차에 대한 최저입찰제 폐지 및 부품사 고정임률제 도입 - 부당내부거래 및 내수 소비자 가격 폭리 규제 및 감독 강화 | |
| 지역본부(산별지역 지부 연대) 지역사회협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단체(예) 공단사용자협회 등을 대상으로 지역 노조들의 공동의 요구나 지역사회의 공익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지역사회협약을 요구함(지역 특성과 주체적 조건에 따라 여러 산별노조 지부들이 모인 '지역본부' 차원으로 다양한 의제의 '지역사회협약'을 체결 할 수 있음) -또한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지부 산하 지회조직을 공단지회로 재편하고, 지역본부와 함께 여러 업종과 한국노총 사업장을 포괄하는 공단노조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공단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업별 지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노동 복지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함. 〈예〉공단주차장 및 교통 편의시설 확충, 공단기숙사 건립, 탁아소·헬스장·공동식당·영화관 등을 공동운영하는 문화복지회관 설립, 공단 차원의 보건안전 진단, 친환경 캠페인, 원하청 불공정거래 감시단 활동, 공단노동자들의 직업훈련 및 직업 알선 활동 등 | |
| 기업별 보충협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지역별 협약의 범위 내에서 기업별 보충 협약 체결 -기업별 노사관계 해당 사항 | |

토 론 문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kilm21@naver.com

-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파악할 수 있음.
- * 민주노조운동이 민주노총 건설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위기 정도가 아니라 존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서, 향후 저성장·위기반복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조직적 변화를 시급히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세워야 할 때.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과제 해결이 필요.
- * 첫째 이념적 과제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정립이 필요함.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세계 지향을 분명히 밝히고 사회적·정치적 운동을 해나가는 노조로서 정체성을 세우는 것.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사회변혁을 위해 노조가 사회적·정치적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 그것은 당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노조나 경제투쟁만을 담당하는 노조를 지양하고 노조 스스로 자기통치할 능력을 키워나가는 대중운동 조직으로 상정한다는 것.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강화를 위해, 집단적인 교육운동을 본격 진행해나가야 하며 따라서 노동조합 교육시간 확보부터가 중요.
- * 둘째 조직적 과제로서, 60~70년대 독일 등 유럽정세에 기반한 산별노조 모델은 한계에 부딪혔는데, 산별노조운동의 위기는 현대차정리해고 저지투쟁, 대우차해외매각 저지투쟁, 한미FTA 투쟁, 쌍용차투쟁의 패배 등 완성차 조합원들을 지역지부 전환으로 이끌어나지 못하는 등 건설과정이 대중운동을 확대해가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데 원인. 따라서 조직재편 문제로 내부 갈등을 조성하는 것보다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조직을 안정화하고, 지역지부의 초기업노조운동과 총연

맹 지역본부 중심의 지역연대운동의 모범 창출에 집중투자 할 때. 이를 위해 지역연대운동의 구심으로서 총연맹 지역본부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관건.

- * 셋째 투쟁과제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수직적 원하청 구조로 되어 있는 한국에서 노동자 내부의 임금·노동조건 격차가 더 확대될 것. 그간은 주로 산별교섭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라나누기로 대응해 왔는데, 산별교섭을 통한 해결은 요원하며 노동유연화를 막지 않는 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라나누기는 오히려 노동강도강화와 저임금일자리로 이어질 공산. 따라서 현재의 제도를 최대한 이용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대임금정책으로, 6~7월에 총연맹을 중심으로 '국민임단투'다운 투쟁을 만들자는 것. 금속은 중앙교섭을 넘어서 제조업 전체로 확대하는 교섭·투쟁을, 공공은 몇 년째 동결인 임금을 최저임금인상만큼 동시에 올리겠다는 발상을 할 필요.

- 들어가는 '정세와 과제' 부분, 전제가 되는 영역에서 몇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음.

우선 발제는, 민주노총 건설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결과라 밝히고 있음. 그러나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음.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 문제는 단순히 민주노총 이후 나타난 문제-이들테면 노사정 합의에 대한 기대 같은-이거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대응을 잘 못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님. 그 뿌리는 최소한 80년대 변혁운동과 87년 이후 대중운동 고양의 단절적으로 변화·발전하게 된 역사에서부터 찾는 것이 필요함. 즉,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또한 발제에서 이야기하는 '노동자운동'의 표현도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노동자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민주노조운동이 전부가 아니며 특히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 서라 하는데, 그런 의미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운동에 그 의미가 들어있음. 그럼에도 노동자운동이라 표현하는 의도는 노동운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보다 사회운동적 의미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하지만 이 역시 노동운동은 노동조합활동을 포함하여 정치활동의 의미와 사회활동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노동운동이 생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발제가 파악하는 바와 같이 이념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그것은 87년 이전의 변혁운동이 현실운동에 대한 구체성 없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전략전술 논의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

하며, 또한 87년 이후 대중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변혁운동 세력들이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면서 자생성을 크게 극복하지 못하게 된 점들이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제라도 노동운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지향을 뚜렷이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토론을 통한 교육운동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동감함.

그러나 발제에서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노동조합 스스로 자기통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대중운동 조직으로 상정하는 한편 정파들이 장애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주장만으로는 노동운동 관련한 조직에 대해 상이 불분명한 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노동조합 조직 자체가 사회운동 조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추측할 수는 있음. 그렇다면 노동조합 조직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는지, 또 현장조직과 정파조직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그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인지 함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산별운동에 대해서는 독일식 모델이라고 파악하고 조직공학적 설계라고 평가하는 한편 현대차·대우차·쌍용차 투쟁의 실패 등 대중운동을 확대해가는 건설과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산별운동이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발제는 지역연대운동의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총연맹 지역본부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총연맹 차원의 산별운동이 독일식 모델로 추진했는지는 몰라도 금속산별운동의 경우 지역차원의 초기업운동을 중심으로 추진된 과정이라는 점이 사실대로 확인되어야 함. 또한 완성차들의 구조조정 투쟁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대중운동으로 확대해나가는 건설과정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평가임. 또 조직재편 문제로 내부 갈등을 조성하기보다는 현실가능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거꾸로 보는 현실인식이라 할 수 있음. 조직재편 문제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은 지역운동에 힘을 모으자는 원안에 대해 기업별 교섭·투쟁을 강조하는 반대안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며, 또 이때 현실가능한 방안으로 추진하지는 말은 사실상 기업별 주장을 옹호하는 의견으로 되는 것임.

지역연대운동의 모범을 만들어내기 위해 총연맹 지역본부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자는 의견 역시 그동안의 노동운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한 평가일 수 있음. 총연맹 지역본부가 지역운동 차원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은 없을 것으로 보임. 현실은, 그렇게 조직공학적으로 설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운동상황과 투쟁전선에서 누가, 어떻게 투쟁동력들을 만들어내고 모

아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위상을 높게 재구성한다고 해서 투쟁이 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모범 창출을 위한 내용상의 제기가 불충분했다는 의견은 올바른 지적이지만, 그것이 현실 운동에 도움이 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산별교섭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기업별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을 뿐 아니라 임금체계 역시 철저하게 기업단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임.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산업 내에서도 기업별 분절에 의한 통일적인 교섭·투쟁이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국민임단투를 하지는 것은 어떠한 메리트와 강제력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지는 것인지가 불분명함. 발제에서 그 사례로 제기하는 경우도 결국 폐지된 이태리와 붕괴된 스웨덴 사례를 들고 있음. 그 외,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춘투도 국민임단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금속의 경우 중앙교섭을 통한 최저임금투쟁 때문에 총연맹 차원의 최저임금투쟁이 여성연맹과 공공서비스노조 일부의 투쟁으로 전락한다는 평가는 일면적인 시각일 수 있음. 금속의 산별최저임금투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임위의 법정최저임상 수준을 앞서 이끌어가는 데 한 몫 해왔다는 평가임. 협약적용의 범위를 해당 산업 전체로 확대해내는 일이 한두 차례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감안하는 시각이 필요함. 물론 현재 산별최저임금투쟁은 법정최저임금을 선도하고 있는 점 외에, 최소한 금속산업 사업장들에서 더욱 분명하게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금속산업 실태에 기초한 최저임금 요구가 수립되어야 하며 또 이를 근거로 한계기업에 대한 자본측의 연대책임과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교섭·투쟁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Alternative Workers Movements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9-12번지 3층
Tel : 02-778-4001~2 / Fax : 02-778-4006
e-mail : psspawm@gmail.com
홈페이지 : www.awm.or.kr